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10 통일 의식 조사 발표

통일 의식 · 통일론 · 통일세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Program

등록 13:00~13:30

제1세션 13:30~15:00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사회 | 신성호(서울대)

결과분석 I

발표1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정은미(IPUS / 사회학)

발표2 대북지원 · 인권 · 북한이탈주민 박정란(IPUS / 북한학)

결과분석 II

발표3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강원택(서울대 / 정치학)

발표4 천안함과 대외인식 이상신(IPUS / 정치학)

휴식 15:00~15:30

제2세션 15:30~18:00 **통일의식 · 통일론 · 통일세**

사회 | 박명규(IPUS소장)

패널 | 김영수(서강대), 박순성(동국대), 박영호(통일연구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정낙근(여의도연구소), 조동호(이화여대), 김병로(IPUS)

Contents

제1세션 13:30~15:00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결과분석 I

발표1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정은미(IPUS / 사회학) / 5p

발표2 대북지원 · 인권 · 북한이탈주민 박정란(IPUS / 북한학) / 28p

결과분석 II

발표3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강원택(서울대 / 정치학) / 63p

발표4 천안함과 대외인식 이상신(IPUS / 정치학) / 78p

제2세션 15:30~18:00 통일의식 · 통일론 · 통일세

김영수(서강대) / 99p

박순성(동국대) / 102p

박영호(통일연구원) / 105p

이상현(세종연구소) / 107p

정낙근(여의도연구소) / 110p

조동호(이화여대) / 112p

김병로(IPUS) / 114p

Session 1

2010 통일 의식 조사 발표

사회 | 신성호(서울대)



결과분석 I

발표1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정은미(IPUS / 사회학)

발표2 대북지원 · 인권 · 북한이탈주민 박정란(IPUS / 북한학)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정 은 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I. 2010년 남북관계의 주요 변화

천안함 사건은 2010년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초래한 국내외적 파장과 영향력은 다시 한번 한반도의 분단 문제가 얼마나 중층적인 문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이념적 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라는 정치권의 판세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파장은 국제무대로까지 확장되어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외교경쟁 뿐만 아니라 신(新)냉전체제를 방불케하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첨예한 외교적 힘겨루기는 G2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하였다. 더욱이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최근 서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북한은 ‘보복성전’을 운운하며 서해 NLL 지역에 백여발의 해안포를 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행히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자제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7월 북한당국은 2009년과 달리 황강댐 방류를 미리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강경한 5.24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더욱 극심해진 식량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대북NGO들의 인도적 지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여론 역시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대북응징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평화공동체 구축과 포괄적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의 건설, 그리고 민족공동체로 향해가는 3단계의 신(新)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 대비를 위한 통일세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의 중층적 구조는 국민의 통일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에 처음 실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2010년의 통일의식조사는 한일강제합병 100주년, 8.15광복 65주년, 6.25전쟁 60주년과 같은 상징적

인 역사적 기념들이 준비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6.2지방선거 등의 굵직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과 정세의 변화가 국민의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우선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대해 기초분석을 한다. 통일인식 파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가 다루어진다. 대북인식 파트에서는 북한의 존재인식, 북한변화 인식,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위협인식,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이 다루어진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비교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조사에서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교차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일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II. 통일에 대한 인식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적극적인 층 증가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9%를 차지해, 반반이라는 응답(20.4%)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0.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9년에서 나타난 55.8%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층이 많이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2009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4.7%에서 27.3%로 증가한 반면에,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률은 4.4%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한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에 23.6%였던 데 반해 올해는 20.4%로 줄어 통일에 유보적 입장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응답자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층이 증가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안보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 통일의 필요성(%)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2008년	25.9	25.7	23.4	19.6	5.4
2009년	24.7	31.1	23.6	16.2	4.4
2010년	27.3	31.8	20.4	16.6	4.0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3.9%)과 호남권(66.4%)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에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중부권(56.8%)과 영남권(50.1%), 강원(47.2%), 제주(54.8%)는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 통일에 소극적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호남권 응답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호남권 응답자들은 75.6%였는데 비해 올해는 66.4%로 크게 감소했다.

2) 통일의 이유… 민족동질성보다 현실적인 이유의 비중 증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3%)를 꼽았다. 하지만 이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24.1%)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20.7%)라는 이유의 응답률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7%)와 ‘북한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4%)의 이유는 계속 줄어들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민족동질성 차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현실적인 차원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고 ‘선진화’ 및 ‘경제성장’ 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 통일의 이유 (%)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북한주민도 잘 살기위해
2008년	57.9	14.5	17.1	6.8	2.8
2009년	44.0	23.4	18.6	8.5	4.2
2010년	43.0	24.1	20.7	7.0	4.0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속도…점진적 통일은 감소하고 빠른 통일은 증가

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급속한 통일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과 비교해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줄어들고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졌으며, 또 통일에 무관심한 층도 줄어드는 특징을 나타냈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66.9%로 2009년에 68.3%였던 것과 비교해 1.4%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10%로 작년에 8.6%였던 것과 비교해 1.4%가 늘었다. 특히,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은 6.9%로 2009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점진적 통일의 응답률은 줄어들고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은 늘어난 것은 두 가지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 붕괴론과 같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다. 다른 하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안보 불안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일을 빨리 이뤄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한 것이다.

〈표 3〉 통일의 추진속도(%)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2008년	65.8	16.3	9.2	8.6
2009년	68.3	15.6	8.6	7.5
2010년	66.9	16.1	10.0	6.9

연령별 변화를 보면, 50대 이상의 변화가 눈에 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전통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가 높았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민족동질적 차원의 응답률은 줄어들고 현실적 이유를 꼽은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50대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를 꼽은 응답률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52.9%로 줄어든 대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이유는 지난해 9.2%에서 올해

14.4%로 증가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인해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 해소’의 응답률이 20대에서는 지난해 26.2%에서 30.7%로 증가하였고, 40대에서도 지난해 19.7%에서 올해 24.3%로 크게 증가하였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비관적인 전망 눈에 띄게 증가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측에서 양극화가 눈에 띄게 뚜렷해졌다. 통일의 시기를 20~30년 이내로 보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크게 줄고, 반면에 5~10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인 전망과 30년이상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은 늘어났다. 통일이 ‘20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과 ‘3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은 24.1%와 13.4%로 2009년에 각각 27.6%와 16.2%였던 것과 비교해 모두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통일이 ‘5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보는 응답률과 ‘1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은 3.4%와 17.8%로 2009년에 각각 2.8%와 16.9%에 비교해 모두 소폭 늘어났다.

특히, 통일이 ‘3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과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응답률은 20.8%와 20.6%로 모두 크게 늘어났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은 늘어난 반면에 통일 가능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난 데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불안한 후계체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의한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인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김정일 사후의 쿠데타 가능성 등과 같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일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른 하나는 천안함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목격하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표 4〉 통일의 가능 시기(%)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2008년	2.3	13.0	22.1	15.5	24.9	22.3
2009년	2.8	16.9	27.6	16.2	16.5	19.8
2010년	3.4	17.8	24.1	13.4	20.8	20.6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1)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으로 동반 상승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3.5%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46.5%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은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다 줄 이익에 기대감은 2008년에 47.5%, 2009년 53.2%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통일이 남한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2008년 11.9%→2009년 14.0%→2010년 14.6%로 증가세이고,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은 2008년 13.9%→2009년 9.9%→2010년 8.5%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태도가 통일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 상승시킨 것을 보인다.

〈표 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감(%)

	매우 이익된다	다소 이익된다	별로 이익안된다	전혀 이익안된다
2008년	11.9	35.6	38.6	13.9
2009년	14.0	39.2	36.9	9.9
2010년	14.6	38.9	38.0	8.5

정치적 성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진보적 성향의 경우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수적 성향에서 기대감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응답률은 진보적 성향의 경우 지난해 62.9%에서 올해 58.3%로 감소한 반면에, 보수적 성향은 지난해 41.9%로 올해 46%로 증가하였다.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상반된 태도 뚜렷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양자의 격차는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영향에 대한 국가와 사회간의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

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은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4.8%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75.2%로 나타나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 결과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태도가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또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 달성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올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9년 23.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이익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9년 75.1%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이익이 ‘전혀’ 안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부정적 태도가 2008년 29.0%→2009년 22.7%→20.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세’ 도입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면해서는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세의 즉각적인 도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가져다 줄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가 작을 때는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양자의 격차가 29.3포인트에서 28.7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호의적 변화이지만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크다.

〈표 6〉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매우 이익된다	다소 이익된다	별로 이익안된다	전혀 이익안된다
2008년	3.3	24.4	43.3	29.0
2009년	4.1	19.8	53.4	22.7
2010년	3.6	21.2	55.1	20.1

4. 통일과 민주주의

... 통일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력 남한은 작아지고 북한은 커짐

조사는 우리 국민이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인식을 갖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응답자는 18%,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9.9%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전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전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더 많은 보여준다.

반면에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자는 51.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반면에 둘 간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조사와 상반된 추세로서 지난해에는 촛불집회의 효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데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해, 올해는 그러한 사회적 사건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항목은 2009년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2년째 조사됨으로써 인식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경우와 달리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는 응답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2009년에 28.7%였는데 비해 5.7%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3.5%로 많이 나타났다. 2009년에 27.7%였는데 비해 5.8%가 증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은 32.2%에 불과했으며, 2009년 43.6%에 비해 무려 11.4%가 줄어들었다.

〈표 7〉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관계(%)

구분 연도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2009년	19.3	28.7	31.2	27.7	49.5	43.6
2010년	18.0	34.4	29.9	33.5	51.9	32.2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민주주의가 통일과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북한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는 민주주의를 완성될 수 없으며 통일과 같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아진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강화는 북한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 절충형과 공존형은 줄어듦 남한의 현재 체제 희망은 증가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질문에 사용했던 남한=‘민주주의’ 또는 북한=‘사회주의’와 같은 규범적 가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2009년부터 ‘남한 체제’, ‘북한체제’와 같은 중립적 용어로 교체하여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냈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에 대한 응답은 크게 늘어나고 남한 체제에 대한 응답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9년 조사는 작년에 이어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어떤 것이길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의 응답률(4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8.7%로 나타나 2009년 39.1%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남북 연합제 또는 연방제와 관련있는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12.6%로 2009년 13.3%에 비해 다소 줄어 들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4.2%로 2009년에 4.0%였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늘어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이나 공존형 등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일 이후의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이 확실히 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009년	43.6	39.1	13.3	4.0
2010년	44.5	38.7	12.6	4.2

한편, 정치적 성향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된다. 올해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남한의 현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진보의 경우 38.2%에서 43.6%로, 보수의 경우 47.3%에서 52.9%로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도의 경우는 지난해 44.4%에서 올해 41%로 감소하였다. 절충형의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의 경우는 줄어들고, 중도의 경우는 늘어났다. 절충형을 뽑은 진보와 보수의 응답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44.8%에서 37.7%로, 33.3%에서 29%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도의 경우는 지난해 38.4%에서 44.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북한권력의 3대 부자세습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에서 실망감이 커져 통일사회의 체제로 절충형과 공존정보다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들이 늘어난 반면에, 중도적 성향에서는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통일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존재 인식

... ‘북한효과’에 의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아짐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4.7%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0.7%, 지원대상 19.3%, 적대대상 12.0%, 경쟁대상 3.3%로 각각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7%가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6%가 감소하여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2008년 5.3%를 최저점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9.0%, 12.0%로 상승하여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이후 진행되는 남북간 대결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북한은 2010년 들어 ‘보복성전’ 선언(10.1.15)에 이어 천안함 공격(10.3.26)을 감행했으며, 남한의 심리전 수단 설치 시 군사적 타격과 함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10.6.12)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 인식의 악화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도발적 행동이 계속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북한의 존재 인식

구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협력대상	57.6	50.7	44.7
지원대상	21.9	17.4	19.3
경계대상	11.3	20.6	20.7
적대대상	5.3	9.0	12.0
경쟁대상	3.8	2.3	3.3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와 20대·50대 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23.8%, 26.2%로 높게 나왔다. 2009년에는 북한의 존재인식에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나, 2010년에는 20대가 50대 이상 그룹 쪽으로 이동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2010년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소위 ‘북한효과’에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변화는 진보의 대북인식이 급격하게 부정적,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진보’가 60.9%에서 49.4%로 줄었으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5.5%에서 18.6%로 늘어났다. 진보의 대북인식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변한 데는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과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대북비판의식 3년 연속 확대, 20대의 보수화 경향 뚜렷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지 않고 있다”(55.1%)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44.9%)는 응답보다 많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은 31.1%(07년)→49.5%(08년)→54.9%(09년)→55.1%(10년)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다른 연령층과 20대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53~54%였으나, 20대에서는 58.4%로 높았다. ‘20대의 보수화’ 명제가 다시 확인된다.

〈표 10〉 북한의 변화 정도

	2008	2009	2010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의식	49.5	54.8	55.1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 진보진영의 대북신뢰도 감소 현상 뚜렷, 천안함사건의 영향 결정적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5.1%로 “가능하다”(34.9%)는 응답보다 약 2배가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이 59.1%에서 65.1%로 6%가 커졌다.

〈표 11〉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능하다”는 응답)

	2009	2010
진보	56.1	43.1
중도	40.1	34.3
보수	28.2	23.8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3.1%)>중도(34.3%)>보수(23.8%)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년 조사와 같은 패턴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09년과 비교하면 보수나 중도에 비해 진보의 북한신뢰도는 13%라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¹⁾ 이는 진보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보수나 중도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2.8%로 작년의 83.7%와 거의 비슷하였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불신은 2008년의 71.7% 보다 11~12%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며, 이는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을 감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표 1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포기하지 않을 것”)

	2008	2009	2010
“포기하지 않을 것”	71.7	83.7	82.8

4. 북한위기의식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의식 가장 크게 느낌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2.4%, “다소 위협을 느낀다” 51.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73.8%(10년)로 작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1) 2009년에는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의 이념지형이 형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지형이 급격히 변하였다. 진보층이 8.2%나 확장된 상황에서 대북신뢰도가 13%나 급추락한 것은 그만큼 대북불신이 단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말해준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67.3%)는 응답이 “없다”(32.5%)는 응답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67.3%(10년)로 변화했다. 이는 작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1.4%가 높아졌던 전쟁 불안감이 천안함 사건이후 2010년에 3.6%가 더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1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008	2009	2010
“있다”	52.2	63.6	67.3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대(74.6%)>30대(69.6%)>40대(63.3%)>50대이상(61.3%)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북한이 선불리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란 현실 판단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과 동일하여 지난 3년간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였다.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0년에는 작년보다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0년에 북한 인지도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관련 이슈가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등 안보불안 의식이 오히려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표 14〉 북한사회 인지도

구분/연도	2008	2009	2010
선군정치	45.4	45.4	52.1
주체사상	78.2	78.0	81.2
천리마운동	78.3	73.6	77.9
고난의 행군	45.7	44.7	53.0
꽃잡이/장마당(09~)	37.5	20.6	32.3
아리랑축전	66.2	61.0	66.7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사회 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북한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지난 3년 동안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인적 왕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37.4%로 지난해의 46.2%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40.8%(07)→31.2%(08)→46.2%(09)→37.4%(10)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는 남북왕래의 단절과 인터넷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의 통제로 북한서적과 매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강산이나 개성 등 북한방문경험자가 지난 3년간 4.5%→3.5%→4.2%→3.8%로 등락을 거듭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반면,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9.3%→10.9%→13.8%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지원활동과 단체참여 경험자는 지난 3년간 2.8%→2.4%→1.4%→2.2%로 부침을 계속했으나, 2010년에는 늘어났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8%), 생활수준(96.3%), 법률제도(88.7%), 언어사용(89.2%), 생활풍습(86.7%), 가치관(94.1%)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각 영역에서 2009년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 약간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2010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북의 동질성 인식을 촉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교차분석

1.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존재인식

… 북한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의 필요성 크게 느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가를 교차분석했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보이듯 북한을 지원대상이나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20.3%, 53.7%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다른 존재인식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북한을 경쟁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29.6%, 26.5%로 북한에 대한 다른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호의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반대로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가는 통일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5>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존재인식의 교차분석(%)

북한 존재 통일 필요성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필요하다	20.3	53.7	2.6	15.8	7.6
그저 그렇다	17.6	41.2	5.3	22.0	13.9
필요없다	20.3	19.3	4.4	29.6	26.5

2.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정권 신뢰성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 크게 느낌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가의 여부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에서 나타나듯, 통일을 논의하는 하는데 있어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그저 그렇다’(30.2%)와 ‘필요없다’(12%)보다

더 높았다. 반대로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는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필요하다’(55.3%)와 ‘그저 그렇다’(69.8%)보다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정권이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일수록 통일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6〉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교차분석(%)

북한정권의 신뢰성 통일 필요성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필요하다	44.7	55.3
그저 그렇다	30.2	69.8
필요없다	12.0	88.0

3. 통일의 이유와 북한 존재인식

…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볼 경우 민족적 동질성 차원에서, ‘협력대상’ 및 ‘경쟁대상’의 경우 경제적 현실주의 차원에서, ‘적대대상’의 경우 안보주의 차원에서 통일문제 접근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는 통일의 이유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표 17>에서 보이듯,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의 이유로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를 선택한 비율이 33.3%로 다른 이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같은 민족이니까’(21.7%)가 높았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의 이유를 민족적 동질성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북한을 ‘협력대상’과 ‘경쟁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의 이유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의 이유를 ‘남북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를 선택한 비율 19%로 다른 이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의 이유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7〉 통일의 이유와 북한 존재인식 교차분석(%)

북한 존재 통일의 이유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같은 민족이니까	21.7	45.8	2.5	20.9	9.1
이산가족 고통해결	16.7	40.5	7.1	23.8	11.9
북한주민 삶 개선	33.3	27.1	2.1	25.0	12.5
전쟁위협 해소	15.2	45.3	2.8	17.6	19.0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18.1	46.8	4.8	21.0	9.3

4. 통일의 이익 기대감과 북한 존재인식

… 북한을 ‘지원대상’ 과 ‘협력대상’ 으로 볼수록 통일의 이익 기대감 높고, ‘경계대상’ 과 ‘적대대상’ 으로 볼수록 통일의 이익 기대감 낮음

1)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 존재인식

북한에 대한 존재인식은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관계가 있다. <표 18>에 나타나듯, 북한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각각 19.8%와 56.3%로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 17.5%와 31.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을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각각 28.7%와 18.6%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 13.4%와 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통일의 집단적 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알 수 있다.

〈표 18〉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 존재인식 교차분석(%)

북한 존재 통일의 남한 이익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됨	19.8	56.3	2.7	13.4	8.0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안됨	17.5	31.2	4.2	28.7	18.6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 존재인식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존재인식이 통일의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한 결과, <표 19>에서 보이듯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각각 25.1%, 54.1%로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 17.9%, 36.5%로 더 높았다. 반면에, 북한을 ‘경쟁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볼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각각 25.9%, 16.3%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 9.4%, 7.1%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익 기대감을 높이는데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 존재인식 교차분석(%)

북한 존재 통일의 개인 이익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통일이 개인에 이익이 됨	25.1	54.1	4.2	9.4	7.1
통일이 개인에 이익이 안됨	17.9	36.5	3.4	25.9	16.3

5. 통일의 이익 기대감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 북한을 신뢰할수록 통일의 이익 기대감도 큼

1)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여부는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였다. <표 20>에 나타나듯, 통일을 논의하는데 있어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 경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49.4%로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 18.2%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81.8%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50.6%)보다 더 높아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교차분석(%)

북한정권의 신뢰성 통일의 남한 이익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됨	49.4	50.6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안됨	18.2	81.8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다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의식이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1>에서 보이듯,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는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57.7%로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25.3%)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상대로 보는 경우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74.7%로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42.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을 신뢰할수록 개인적 이익 기대감도 높다.

〈표 21〉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과 북한정권 신뢰성 교차분석(%)

북한정권의 신뢰성 통일의 개인 이익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통일이 개인에 이익이 됨	57.7	42.3
통일이 개인에 이익이 안됨	25.3	74.7

6. 통일의 가능시기 예상과 북한 존재인식

... 북한을 ‘지원대상’ 과 ‘협력대상’ 으로 볼 경우 통일을 가까운 미래로, ‘경계대상’ 과 ‘적대대상’ 으로 볼 경우 통일을 먼 미래로 봄

흥미롭게도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서 보이듯,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볼 경우 통일의 시기를 ‘20~3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 경우 통일의 시기를 ‘5~1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을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응답률이 각각 31.6%와 19%로 가장 높아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겨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여겨 인도적 지원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보다 국민들은 통일의 시기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통일을 먼 미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표 22〉 통일의 가능시기와 북한 존재인식 교차분석(%)

북한 존재 통일 가능시기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5~10년 이내	17.9	55.1	2.3	13.7	12.0
20~30년 이내	21.1	49.1	2.8	17.9	9.1
30년 이상	15.7	42.2	5.2	25.3	11.6
불가능하다	19.0	26.7	3.6	31.6	19.0

7. 통일의 가능시기 예상과 북한정권의 신뢰성

… 북한의 신뢰도 높을수록 통일을 가까운 미래로, 신뢰도가 낮을수록 통일을 먼 미래로 봄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의식이 통일의 가능시기 예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한 결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표 23>에서 보이듯,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볼 경우 통일이 ‘5~1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상대로 볼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응답률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북한정권을 신뢰할 경우 통일을 가까운 미래로,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통일을 먼 미래로 생각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미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북한정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3〉 통일의 가능시기와 북한정권의 신뢰성 교차분석(%)

북한정권의 신뢰성 통일 가능시기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5~10년 이내	52.5	47.5
20~30년 이내	39.7	60.3
30년 이상	29.3	70.7
불가능하다	15.8	84.2

2)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 가능시기와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금강산,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통일가능 시기를 5~10년 이내로 예상하는 비율이 79.4%로 가장 높았다(20~30년 이내 73.9%, 30년 이상 66.7%, 불가능하다 49%). 반면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통일가능 시기를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10년 이내 20.6%, 20~30년 이내 26.1%, 30년 이상 33.3%)

V. 결론

2010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은 늘어났지만,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현실주의적인 접근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또는 양면적 의식 구조의 특징이 나타났다. 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졌으며, 또 통일에 무관심한 층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은 통일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과정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접근 태도가 뚜렷해졌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민족동질성보다는 전쟁위험의 해소나 경제적 이해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꼽은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53.5%로 높은 반면에,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집단과 개인의 인식 격차가 컸다.

두 번째 특징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효과’가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먼저, 천안함 사건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한 빠른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높이는데 반작용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는 보는 인식은 2009년에 7%가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6%가 감소하여 2년 연속 줄어들었다. 또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49.5%(08년)→54.9%(09년)→55.1%(10년)로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고, 북한과 “대화과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도 59.1%에서 65.1%로 6%가 커졌다. 또한 ‘북한효과’는 잠시 주춤하던 20대의 보수화를 다시 강화시켰으며, 진보진영의 대북비판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 불안정은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반면에 통일방식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갖게 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 붕괴론과 같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률과 통일이 5~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유력해지면서 통일방식에서 북한체제와의 공존이나 절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늘어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이나 공존형 등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일 이후의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이 확실히 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와 3대 부자 권력세습은 통일이 북한의 정치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는 민주주의를 완성될 수 없으며 통일이 북한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특징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보수층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이유와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북한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북인식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통일 의식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통인인식과 대북인식을 교차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은 통일 시기를 가까운 미래로 예상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집단적·개인적 이익 기대감도 컸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을 ‘협력 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이익 기대감, 통일의 가능시기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우리민족끼리’ 구호를 앞세우기 이전에 추락한 북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협력과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식조사는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또는 사회)간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을 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만약에 통일이 가져다 줄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가 작을 때는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은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15경축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북지원 · 인권 · 북한이탈주민

박 정 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현재’로 부터, 그리고 ‘사회심리적’ 비용으로의 확대
- II. ‘대북,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
- III. 북한·남북관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의식
- IV.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의식
- V. 국민의식의 지형도
- VI. 결론: 국민 의식의 향방과 통일론, 통일세

I. 서 론: ‘현재’로 부터, 그리고 ‘사회심리적’ 비용으로의 확대

최근 8·15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비용, 통일세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논의의 확산과정에서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통일 비용, 통일론 등에 대한 논의와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통일세’ 자체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실제 소요되고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통일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일세’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직접적 논의는 기존의 ‘과세부담’에 대한 투영효과로 인해 통일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국민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통일비용 부담을 충당하는 데 공감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 다룰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민의식은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경제적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 현재진행형의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있는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과 나아가 통일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점에서 통일 비용 부담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대북지원이 갖고 있는 인도적, 남북한의 상생 의미와 더불어 통일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한층 깊게 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북지원이 분단의 벽에 막혀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바로 현재, 한 지역에서 이웃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현실적 이해관계의 반영과 미래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글은 경제적 통일비용 부담 논의와 더불어 사회심리적 통일비용 부담으로 논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동서독이 경제적 통합과 통일비용 부담과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남북한의 분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념적 대립과 경제발전 격차, 60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사람들간의 사회심리적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그로인한 난관이 결코 동서독의 그것과 비교해 가벼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통일비용 논의가 경제적 차원의 논의와 대비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져 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다룰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친밀감, 직장 동료, 이웃, 결혼상대자, 사업동업자로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 가 등을 파악하여 현재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수준과 미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심리적 통합 비용 부담을 예측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과 더불어 남북관계에서 파생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를 포괄한다. 인권과 북한이탈주민·대북 ‘지원’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인권 개선과 지원의 연계에 대한 우리사회 내부의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양자에 대한 연계 논의가 UN, 국제금융기구,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행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식의 연계적 분석은 시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본 글은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세 영역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의식과 내용의 축을 바탕으로 한 쟁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의식 지형변화가 있는 가를 파악하여 쟁점 분석에 있어 심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II. ‘대북,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

1. 대북지원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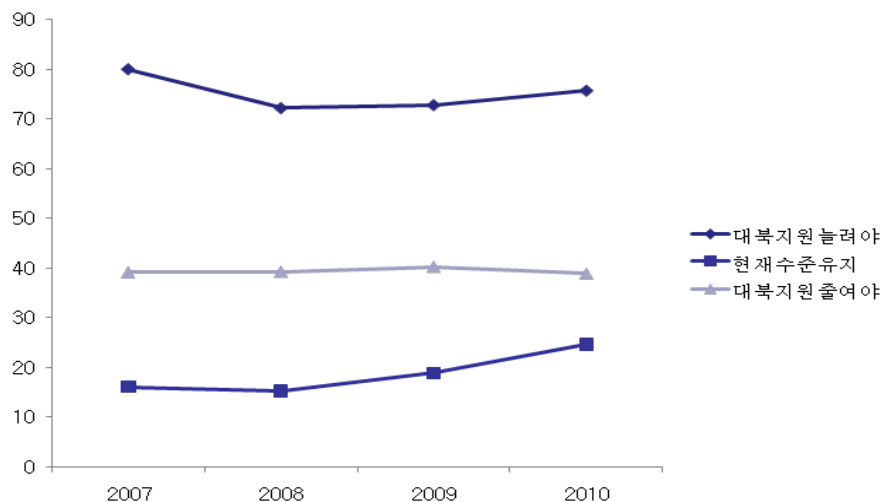
가. 대북 지원 수준의 적절성

- 대북지원 ‘축소’ 견해가 가장 많으나 ‘확대’ 견해 상승세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36.4%를 차지하였다. 오히려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24.7%에 머물렀다.

즉, 대북지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각각 응답률이 감소하거나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대북 지원 수준의 적절성 견해 추이



나. 대북 지원 수준 축소 이유

-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 가장 큰 이유이나 ‘국민 부담의 증대’ 더불어 하향세,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 ‘국내 정치적 이용’ 은 상향세

대북지원을 축소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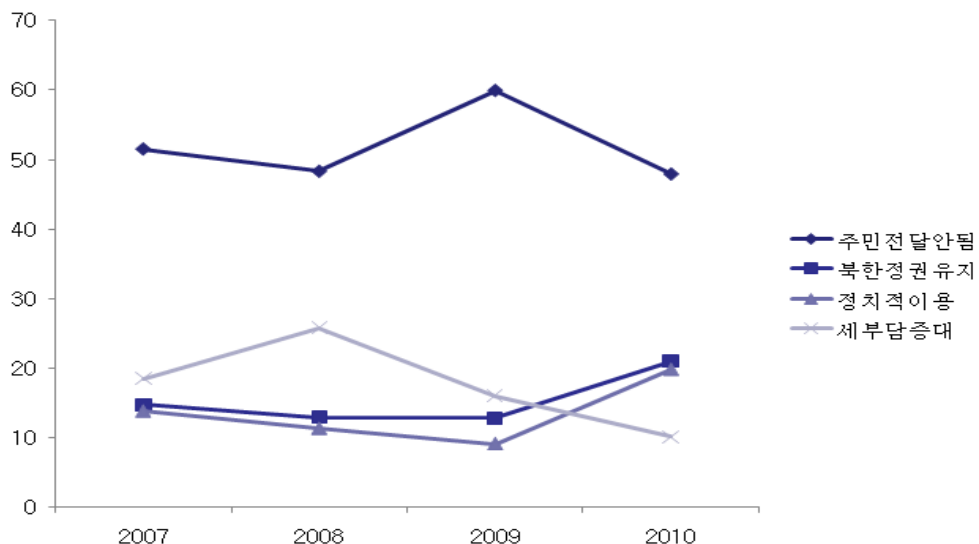
과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0%였다. 다음으로는 ‘국내 정치적 이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19.8%, 마지막은 ‘국민 부담의 증대’라는 응답으로 10.1%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지난 시기의 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작년 대비 12%나 줄어들었고, ‘국민 부담의 증대’ 응답도 매년 하향되는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국내 정치적 이용’과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응답 추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것이 ‘성별, 정치성향별’ 견해 차였다. 성별로 보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여성(17.2%)에 비해 남성(24.7%)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견해에서는 여성 응답률(13.8%)이 남성 응답률(6.4%)을 넘어섰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에서 진보(진보 48.2%)와 중도(50.4%)가 비슷한 응답률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보수 집단은 42.8%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중도(13.3%)와 보수(13.4%)가 모두 10% 대를 넘는 반면, 진보는 2.2%에 그쳤다.

〈그림 2〉 대북 지원 수준 축소 이유의 추이



문항	찬성비율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응답 추이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지원 증대 필요 견해 2007년: 16.1%→ 2008년: 15.3% → 2009년: 18.9% → 2010년: 24.7%	
대북지원 축소 필요성 이유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47.9% → 북한 정권 유지 21.0% →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 19.8% → 국민 세 부담 10.1%	북한 정권 유지 이유에서 ‘성별’ 차이 북한주민 전달 문제 ‘성별, 정치성향별’ 차이

다. 대북 지원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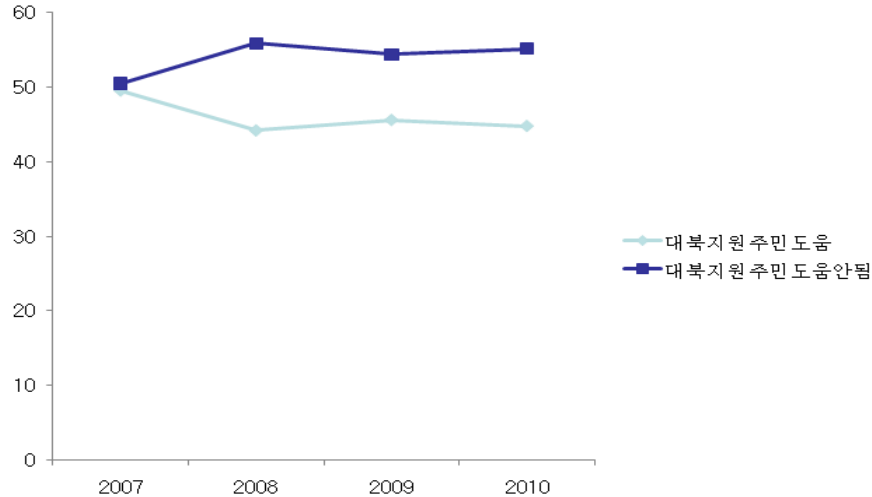
- ‘통일에는 도움,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는 도움 안된다’ 견해 과반수 이상으로 고착화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와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물었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수를 넘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4.8%)을 10% 이상 앞섰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견해차를 보면, 우선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 지역, 정치성향, 연령대에 따른 견해 차가 두드러졌다. 우선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40.8%, 고졸 42.3%, 대재 이상 47.3%)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고, 지역별로는 호남(62.2%)권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영남권이 35.2%로 긍정적 평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가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51.1%)율을 보였고, 진보 51.1%, 보수 37.6%로 나타나 진보와 보수의 견해 차가 10% 이상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는데 40대의 긍정적 평가율이 49.8%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는 38.5%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려 대비를 이루었다.

〈그림 3〉 대북 지원의 효과성 견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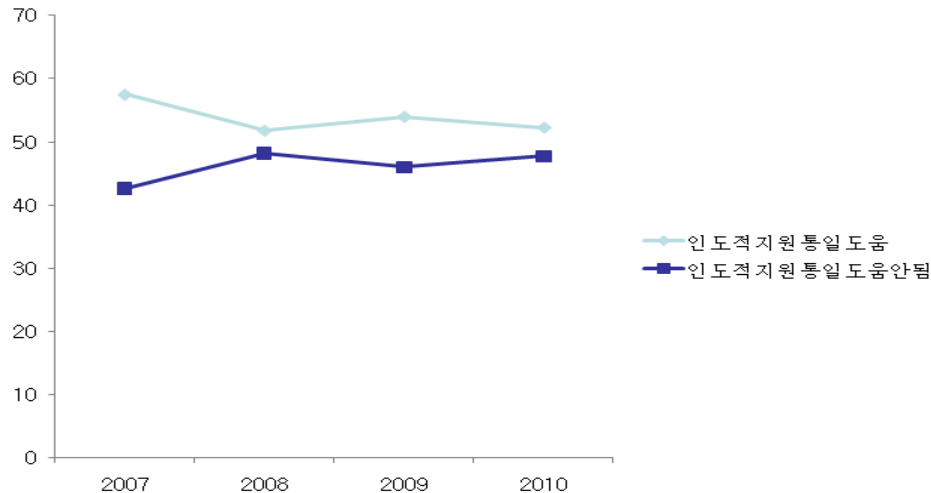
반면,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52.3%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47.7%)를 앞섰다. 양 문항에 대한 답변 추이 모두 지난 2007-2010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당 기간 견해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률을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 교육, 지역, 정치성향, 가구소득에 따른 견해차가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40대(58%)가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응답률(중졸 이하 41.0%, 고졸 51.9%, 대재 이상 54.4%)을 보여, 앞서 보았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추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응답률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응답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68.1%)을 보였고, 영남(41.7%)이 가장 낮게 나타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6.3%)의 긍정적 견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도(51.1%), 보수는 48.7%로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지난 조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견해차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일에의 도움정도 견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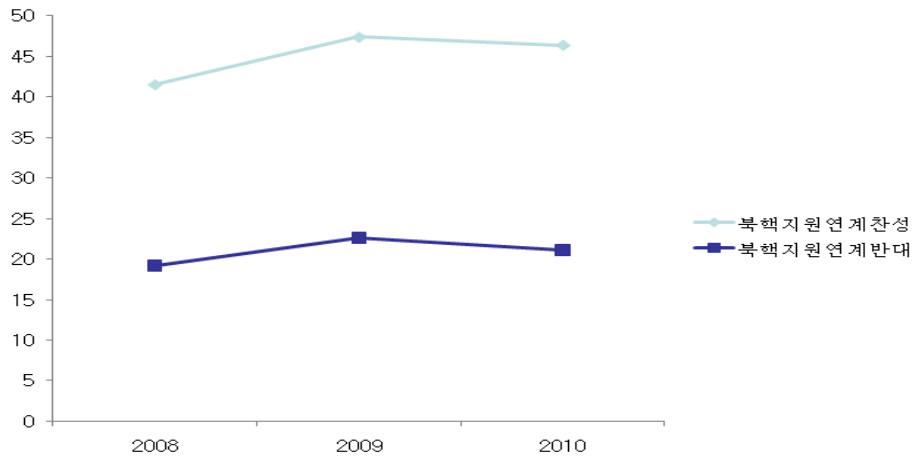


라.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에 대한 견해: ‘연계해야’ 과반수 임박으로 고착화 추세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연계해야한다는 견해가 46.4%로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21.1%)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연계를 반대하는 견해는 2008년도 처음 조사 시기와 2009년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나 연계를 찬성하는 견해는 2008년 대비 2009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 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무력 수단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국민들이 의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견해차를 살펴보면, 성별, 교육, 지역, 정치성향에 따른 견해차를 읽을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 연계에 찬성하는 비율이 성별로 보면 여성(49.3%)이 남성(43.5%)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55.5%, 고졸 50.7%, 대재 이상 41.7%), 보수성향(50.2%)이 진보(45.5%)와 중도(4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37.8%로 여타 지역 대비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림 5〉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에 대한 견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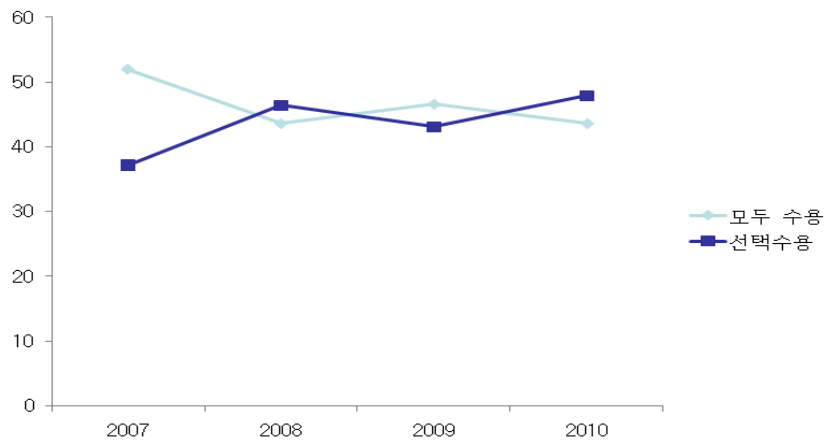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

가.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 ‘모두’ 수용에서 ‘선택적’ 수용으로의 중심 이동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47.9%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 43.6%를 앞섰다. 이는 2007, 2009년 조사결과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선택적’ 수용을 앞선 것에서 변화된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해 2007년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52%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37.2%를 10% 이상 앞섰으나 매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3.6%)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7.9%)을 추월하게 되었다. 매해 조사결과에서 양 견해의 응답률 폭이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선택적’ 수용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앞서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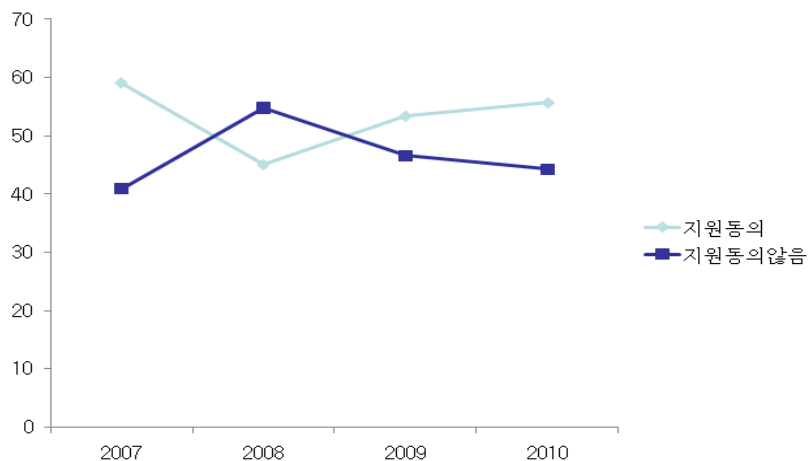
〈그림 6〉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추이



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더 많은 지원 필요 상승세-중간소득층의 부정적 시각

정부가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5.7%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 44.3%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작년에 비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2008년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도 대비 10% 이상 낮아진 것에서 2009년 다시 반등, 2010년까지 상승세로 이어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서 보았던 탈북자가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양상이다. 즉, 2007년 응답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2008년도의 경우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탈북자가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 2010년 점차 상승세로 이어져 2007년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추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에서는 가구소득수준과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를 눈여겨 볼만한데,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200-299만원, 300-399만원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동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많았고, 중간소득층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덜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최근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산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여타 지역이 동의 비율이 60%대 이상인 반면, 영남, 강원이 각기 36.9%, 4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보적 성향일 경우 63.4%, 중도, 보수는 각각 51.8%, 52.5%로 동의 비율이 진보에 비해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Ⅲ. 북한·남북관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

- 북한 인권 개선의 '신속·지속성' 요구 증가세

2010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 문항은 3문항이다. 2문항이 북한 내부 인권, 1문항이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으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이다. 공통적인 특징은 3문항 모두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과 해마다 찬성 견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야 하며(69.5%),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 인권 개선'과(82.8%), '이산가족·국군포로'문제 해결이 시급(75.7%)하다는 것이다. 또한 3문항 모두 해마다 동의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두드러지는 견해 차는 '학력'과 '지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과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영남권에서 찬성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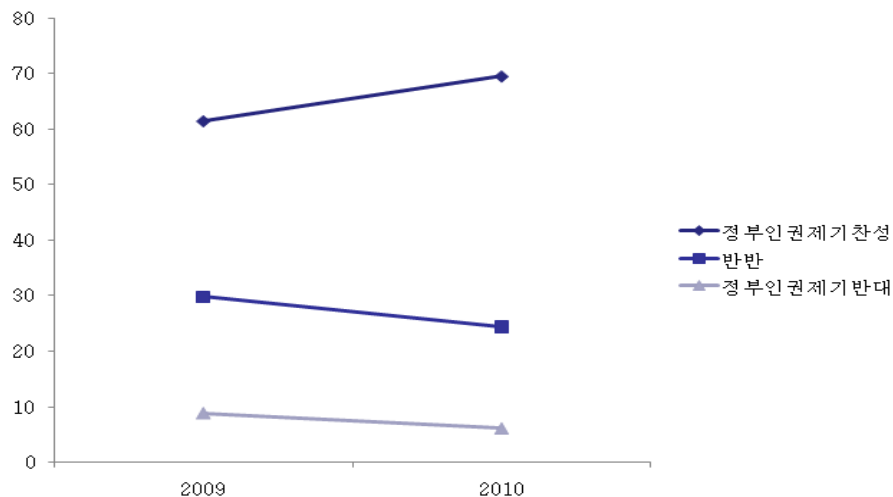
문항	찬성비율	응답자 특성별 주요 응답 추이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찬성 비율 2009년: 61.4% → 2010: 69.5%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한가'	찬성 비율 2008년: 75.9% → 2009년: 76.2% → 2010년: 82.8%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응답률 높아짐, 영남 지역이 73.5%로 가장 낮은 응답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시급한가'	찬성 비율 2007년: 80% → 2008년: 72.2% → 2009년: 72.8% → 2010년: 75.7%	영남권에서 59.9%로 가장 낮은 응답, 중부권에서 88.1%로 가장 높은 응답

1.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북한 내부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는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한가’를 물었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가 69.5%로 반대한다는 견해(6.1%)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찬성견해는 2009년 61.4%에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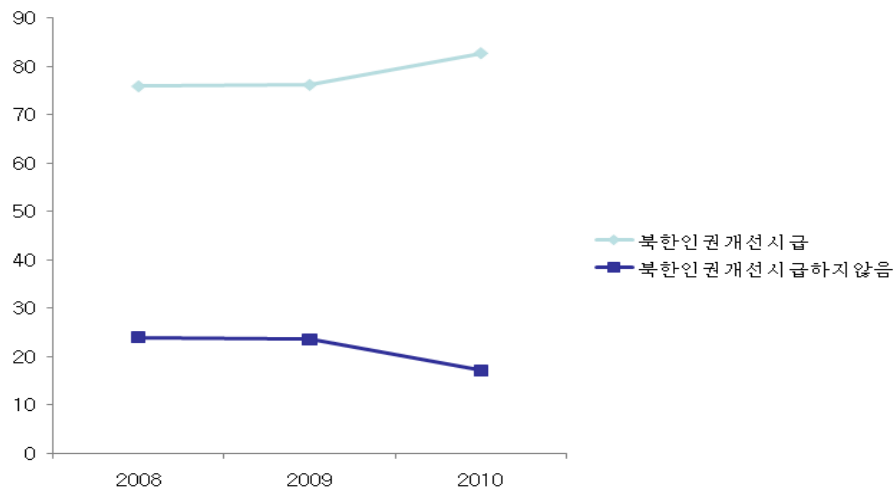
〈그림 8〉 정부의 북한인권 제기에 대한 견해 추이



2.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은 82.8%로 2008년: 75.9% → 2009년: 76.2%에서 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 견해차를 보면, 연령, 교육, 지역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띈다. 연령대별로는 시급하다는데에 공감하는 비율이 40대(86.9%)와 50대(79.1%)의 대비가 두드러졌고,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78.6%, 고졸 81.6%, 대재 이상 84.3%) 시급하다는데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73.5%)이 여타지역 대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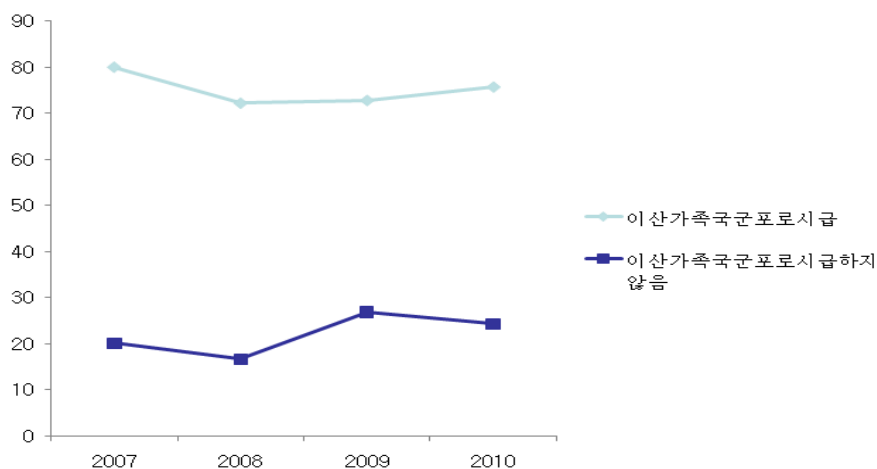
〈그림 9〉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 견해 추이



3.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

남북한관계에서 파생된 인권문제와 관련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급하다는 응답이 75.7%로 나타났고, 응답자 특성별로는 지역별 견해차가 눈에 띈다. 즉, 중부권과 영남권이 대비를 이루는데, 영남권에서 59.9%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 중부권에서 88.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10〉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 견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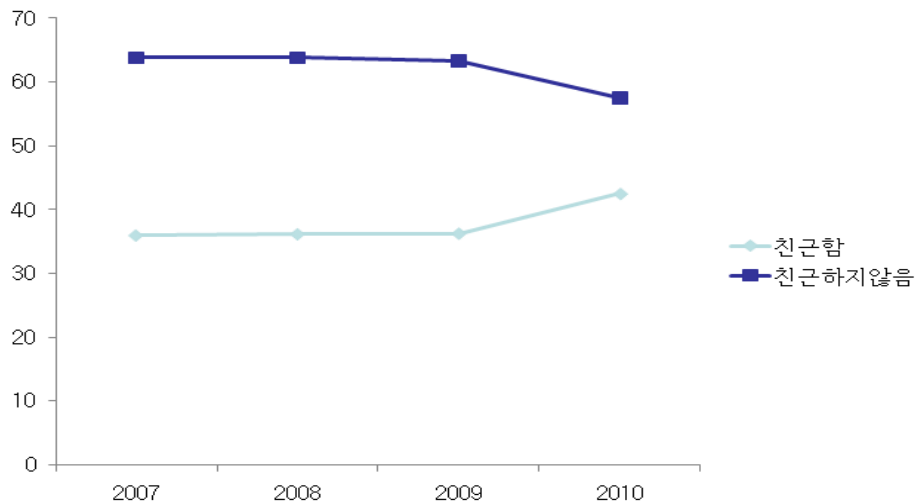
Ⅳ.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인식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소폭의 상승세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7.5%로 나타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42.5%였다. 이는 2007-2009년도와 비교할 때 약간씩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다.

응답자별 응답 분포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다. 즉, 지역별로는 친근하다는 응답이 제주, 수도권, 중부권에서 각기 53.8%, 47.3%, 47.5%였으나 영남권은 32.1%로 앞선 세 지역 보다 20% 이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50.4%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중도,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각기 38.1%, 39.6%로 약 10% 가량 낮게 나타났다.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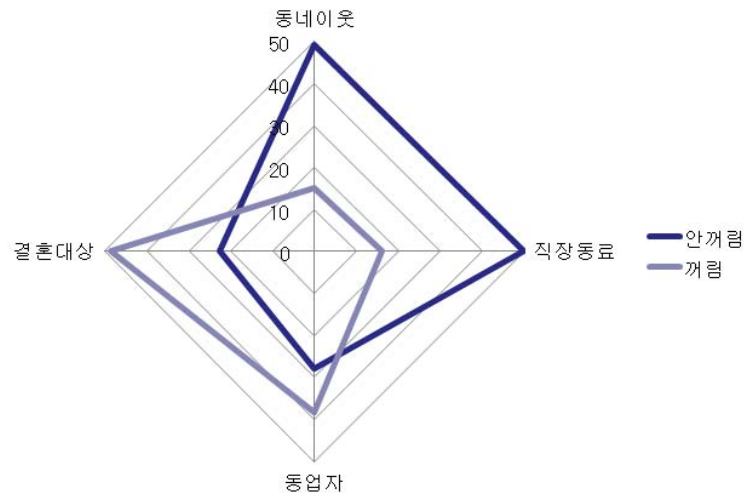


2. 관계 유형별 태도: 꺼리지 않는 ‘동네이웃, 직장동료’ vs. 꺼려지는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린다는 응답보다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은 반면,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는 꺼린다는 응답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네이웃,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다

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면서, 매년 상승세이나 사업동업자와 결혼상대자로서는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못 미치면서 매년 비슷한 인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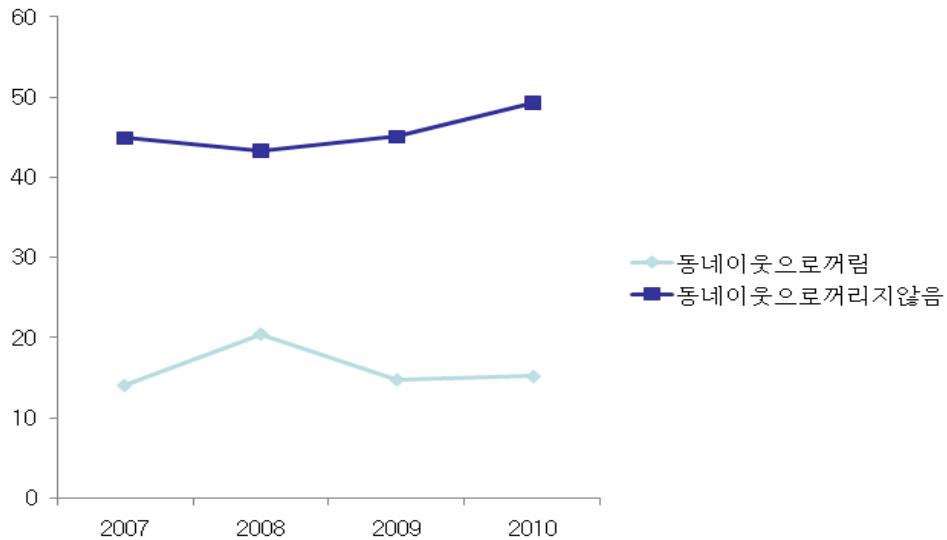


가. 동네 이웃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 관계를 맺는 데에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9.3%로 과반수 가까이 나타났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교육,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직업과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교육 수준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중졸이하와 대재 이상의 응답 차이가 7%가량 나타나고 있는데, 중졸 이하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20.9%, 대재 이상은 13.4%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이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34.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자영업자, 블루칼라는 각기 10.3%, 11.9%로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20% 이상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그림 1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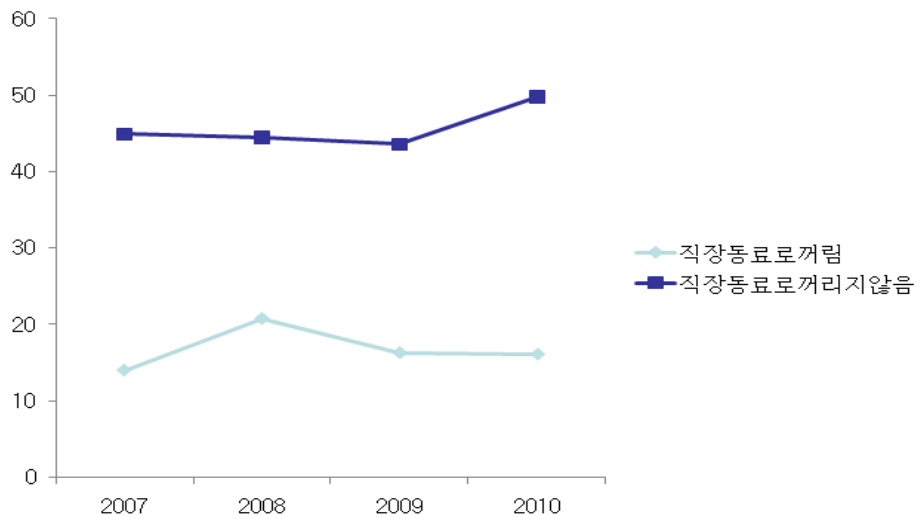
나. 직장 동료

탈북자와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9.8%로 과반수 가까이 이르렀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6.1%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 매년 조사결과에서 별다른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탈북자와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우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에서 꺼린다는 응답이 24.5%로 평균(16.1%)을 10% 가까이 상회하였으며, 대재 이상은 13.2%만이 꺼린다는 응답을 보여 평균치를 밑돌았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탈북자와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37.6%로 여타 직업 종사자들이 12-18% 사이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드러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응답차가 눈에 띈다.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22.6%인데,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12.4%로 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이 10% 가량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탈북자와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영남, 강원에서 각각 25.5%, 27.8%로 여타 지역이 10% 내외의 낮은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1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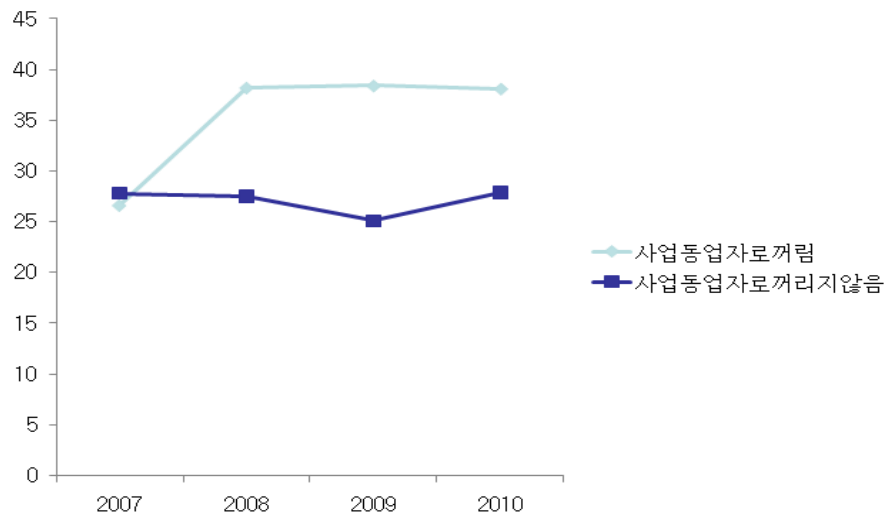
다. 사업 동업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38.1%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27.9%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앞서 보았던 동네 이웃,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맺기에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꺼린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 맺기에서도 사업동업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 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교육수준별, 직업별, 가구소득수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와 대재이상의 차이가,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과 여타 직업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구소득수준별 견해 차이는 앞서 보았던 동네 이웃,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맺기를 꺼리는 응답이 2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사이의 소득자들은 각각 42.2%, 42.8%이나 400만원 이상의 경우 33.0%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자가 사업동업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를 꺼린다는 응답이 47%로 진보적 성향일 경우 32.6%에 머무는 것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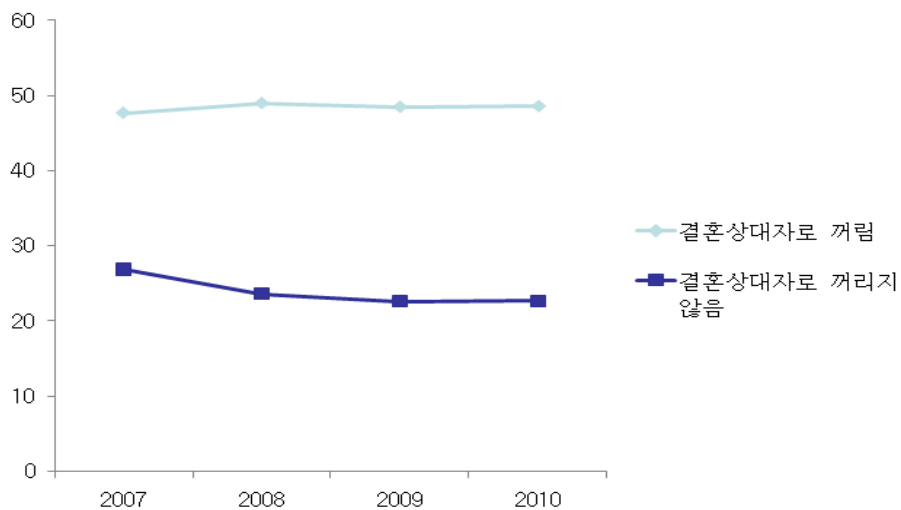
〈그림 1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라. 결혼상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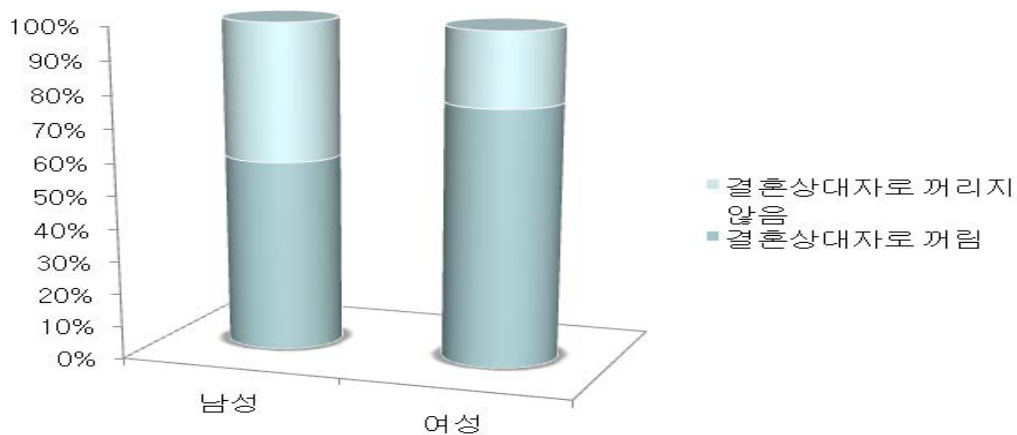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린다는 응답이 48.6%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28.7%,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이에 못미치는 22.7%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는 2007년-2009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1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1)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 관계 맺기에 대한 응답률 차이는 성별, 직업별, 연령대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성별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즉,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남성은 40.9%인 것에 비해 여성은 56.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꺼려하고 있었다.

〈그림 17〉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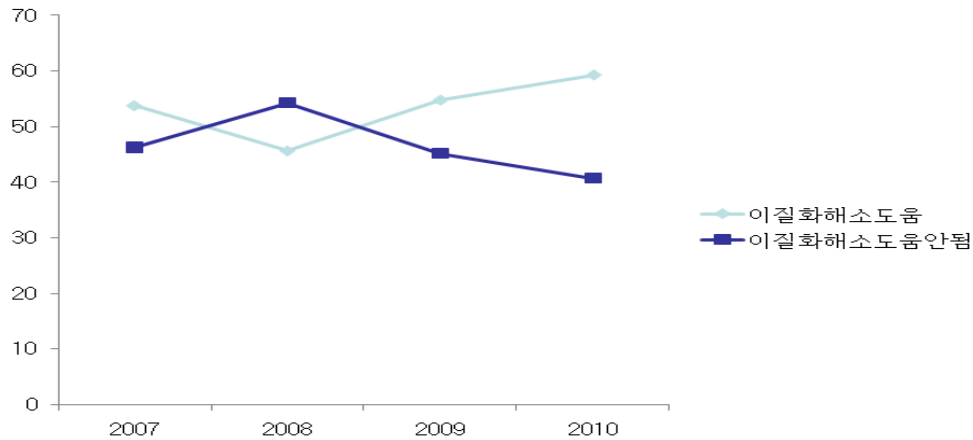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긍정적 응답 우세 및 상승세, 응답자 성향에 따른 폭넓은 견해 차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9.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 가량 상승한 것으로 2007년 53.8%를 기록한 이래, 2008년 45.7%로 하강하다 2009년, 2010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8〉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탈북자의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는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따라 견해 차가 폭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이상의 동의율이 62%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는 48.1%에 머물렀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각기 61%, 64%, 61.9%로 모두 60%대를 상회하였으나, 농수축산업, 전업주부는 각기 43.2%, 53.9%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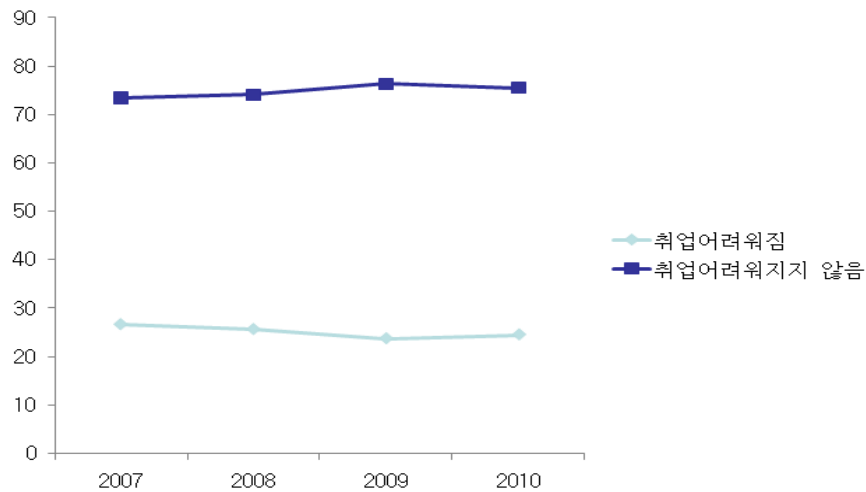
지역별로도 견해차가 컸는데,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제주가 각기 62.5%, 71.2%, 67.2%, 61.5%로 모두 60%대를 상회한 것과 대비해 영남권, 강원은 각각 46.9%, 52.8%에 머물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자가 동의 비율이 69.4%로 중도 55.2%, 보수 52.5% 보다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영향 크지 않는다는 견해 우세 및 고착화, 직업별 위기 의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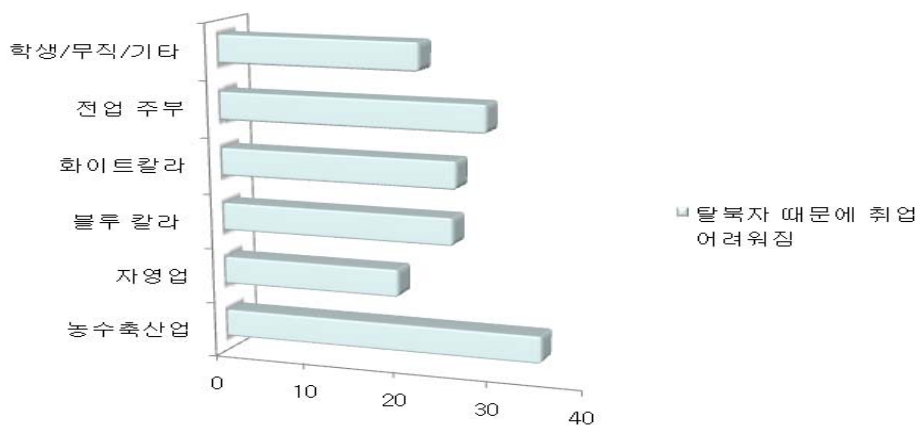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4.5%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5.5%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도 이후 별다른 변동폭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2007-2009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9〉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견해 차가 눈에 띈다. 직업별로는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비율이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업주부 28.7%, 화이트칼라, 블루 칼라 각각 25.6%, 25.3%였으며, 자영업자와 학생/무직/기타인 경우 각각 19.4%, 21.6%로 나타났다. 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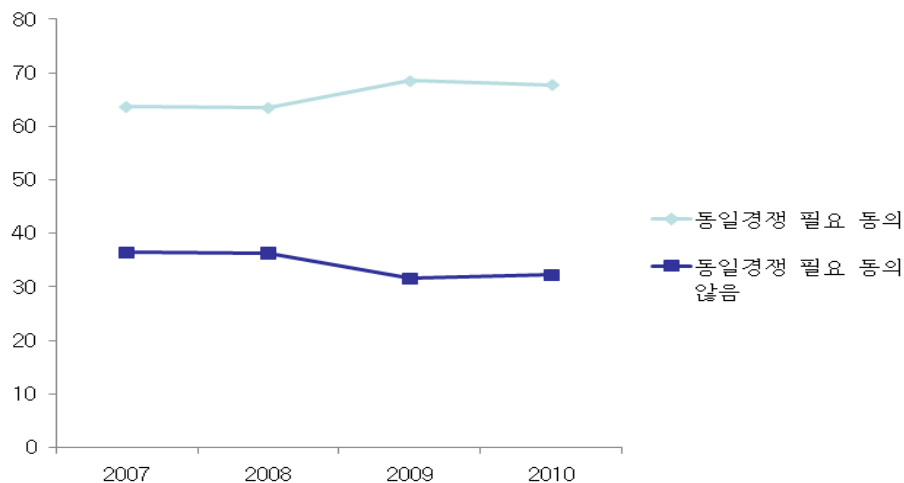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강원, 영남권이 각각 30.6%, 26.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중부권, 제주, 수도권, 호남권이 각각 20.8%, 15.4%, 23.7%, 24.4%였다.

5. 북한이탈주민과의 경쟁

- 조직내 동일한 경쟁 필요 우세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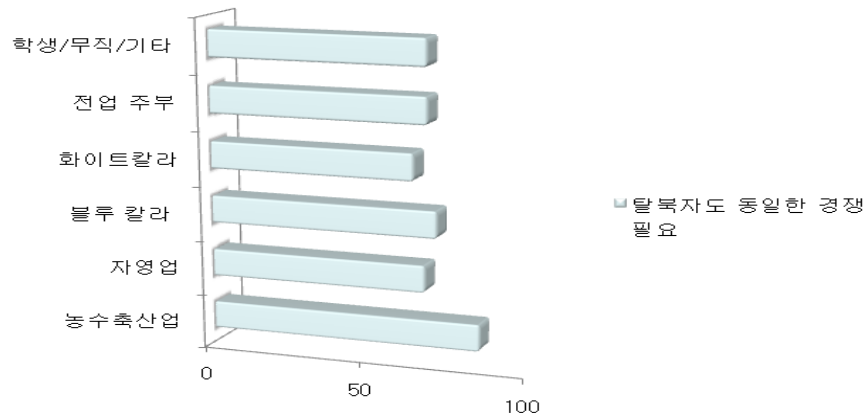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67.8%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탈북자들도 조직 내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7-2009년도 응답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그림 21〉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 (1)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별 견해 차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조직내에서 동일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84.4%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였고, 여타 직종은 60-70% 내에서 응답률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 (2)



V. 국민의식의 지형도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식

가. 영역별 응답자 분포 지형

대북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조건부적,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집단은 여성, 30대, 저학력, 영남권 거주자로 압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낸 집단은 다음과 같다. 즉, 남성, 40대, 고학력자, 호남권 거주자, 진보적 이념 성향을 드러낸 집단이다.

북한인권, 또는 남북관계에서 파생된 인권으로서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등의 해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견해를 보인 집단은 남성, 40대 연령층, 대재 이상, 진보적 이념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 50대 이상, 저학력, 영남권 거주자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선호 내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남성, 대재 이상,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에 부정적인 집단은 여성, 중졸 이하, 200~299만원 소득 가구,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남·강원권 거주자, 보수적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견해차를 보이는 응답 집단을 도출하였는 바, 각 영역별로 나타난 공통적 응답자 특성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에서 두드러지는 응답자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응답 집단 특성은 남성이면서, 40대, 대재 이상, 진보적 이념성향을 지닌 경우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호의적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호의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 중졸이하, 영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 영역	선호도↑	선호도↓	특징
대북지원	남성, 40대, 대재 이상, 호남권, 진보	여성, 30대, 중졸 이하, 영남권	- 영역별 견해차 공통분모: 성별, 학력, 이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 가구소득, 직업 차 다른 영역에 비해 두드러짐, 강원 지역의 부정적 의식
북한인권	남성, 40대 연령층, 대재 이상, 진보, 호남권	여성, 50대 이상, 중졸 이하, 영남권	
북한이탈주민	남성, 대재 이상,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 진보	여성, 중졸 이하, 200-299만원 소득 가구,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남·강원권, 보수	

나. 응답자 특성별 의식 지형

본 글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특성별로 어떠한 의식 지형을 그려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견해차가 나타난 문항이 많을수록 견해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견해차가 드러난 문항이 적다고 해서 그 함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 몇문항에 포함된 함의가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각 배경별로 어떠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함의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국민의식의 지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성별: 여성의 위기인식과 방어기제

대북지원 관련 문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북지원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앞서고 있으며, 여성이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남성에 비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로 오용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 인식을 더 크게 가지고 대북지원 등을 통해 제재해야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라는 인도주의적 목적 관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남성은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라는 정치적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여성에 비해 크다 하겠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통합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다는 점, 범죄 노출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 부담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성들이 ‘지원’과 관련한 비용 발생에 남성에 비해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거리두기’라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비용, 통일세와 같은 경제적 비용 마련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요구와 불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연령: 대북지원, 인권개선 요구가 가장 큰 40대

연령에 따른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문항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에서이다. 여기서 특히 40대와 여타 연령대의 견해 대립이 눈에 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는 40대와 30대,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는 40대와 여타 연령대,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서는 40대와 50대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른바 386세대인 40대의 견해는 여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3) 교육: 대재이상의 대북지원 효과성, 인권개선시급성 요구, 북핵과지원 연계반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졸이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맺기 거부감

교육수준별로는 7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크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대북지원을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조건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에는 중졸 이하의 거부감이 가장 컸다. 또한, 중졸이하 학력자들이 고졸,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북한이탈

주민이 ‘남북 이질화 해소’라는 비교적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대북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의도가 적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으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력수준이 낮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경쟁적 위기의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과의 노동 시장 내 경쟁상황을 가장 먼저,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쟁·대립의식을 나타내는 집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통합 시 노동시장 형성 추이와 경쟁·대립구도를 보일 인력 구도를 예견하는 것과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예견되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조정, 완화해 나가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직업: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직업별로는 총6개 문항에서 견해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 6개 문항에서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견해가 여타 종사자들과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며, 6개 문항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꺼리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역할로서 ‘남북 이질화 해소’에 대한 공감도도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며, 조직 내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장 많이 드러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국한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대북지원이나 인권관련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멀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항은 직접적인 삶의 연계성이 반영되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경쟁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인식

가구소득별 견해차를 보인 2문항은 모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와 관련한 것이다. 특히 관계 맺기에서도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관계에서 200만원 가구 소득 응답자들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앞서 보았던 직업별 견해차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동시장 내 경쟁의식과 위기의식이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지역: 영·호남 대비보다 영남 대 여타 지역, 호남대 여타지역 대비

총 10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견해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비해 여전히 많은 논점에서 견해 차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지역차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영호남 갈등’은 뚜렷하지 않다. 영남, 강원 지역과 여타 지역, 내지 호남과 여타지역이 문항에 따라 견해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영남 지역과 여타 지역의 견해 차가 눈에 띈다.

영호남의 대립적 견해는 총 10문항 중 1문항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였다. 여기에서 영남지역이 기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영남지역은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체 영역에서 여타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북한 인권 개선,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성 인식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동네이웃’,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공감도를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역할 인식의 공감도도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은 강원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강원 지역은 북한과 가장 인접하고 있으면서, 북한 지역 실향민들이 거주율이 여타 지역대비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을 투사해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과 견해차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10문항 중 1문항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대비 연계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정부의 주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남지역에서 오히려 북한이탈주민과 인권문제 등을 대북지원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지역별 견해차가 가장 많은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영호남의 정치적 지지세 형성을 영호남 지역의 국민의식에 있어서도 상호 대립된다는 구도로 오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7) 이념: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견해차,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념성향별로는 총 7개 문항에서 견해차가 나타났는데, 주로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항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수보다 진보·중도가 긍정적이고, 인도적 지원의 통일 기여도에 대해서도 진보가 보수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지원 확대 등에서 진보가 보수에 비해 호의적 답변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인권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별다른 인식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념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응답자 특성별 견해차>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성별	대북지원 축소 필요성 이유	북한 정권 유지: 여성 응답 < 남성 응답
		북한주민 전달 문제: 여성 응답 > 남성 응답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여성 찬성 > 남성 찬성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	여성 거부감 > 남성 거부감
연령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30대 긍정 < 40대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40대 > 20대·30대·50대 이상
	인권 개선의 시급성	40대 공감 최고, 50대 공감 최저
교육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학력 높을수록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학력 높을수록 긍정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학력 높을수록 반대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학력 높을수록 공감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직업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농수축산업, 주부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짐	농수축산업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도 조직 내 동일 경쟁 당위성	농수축산업 공감도 최고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가구소득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200만원 미만 거부감 > 400만원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200만원 미만 거부감 > 400만원 이상 거부감
지역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영남권 긍정 < 호남권 긍정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호남권 찬성 최저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영남권 공감 최저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	영남권 공감 < 중부권 공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영남권 최저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기	영남권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영남, 강원권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짐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고
이념성향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보수 긍정 < 진보·중도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보수 긍정 < 진보 긍정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보수 찬성 > 진보·중도 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중도·보수 공감 < 진보 공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보수 거부감 > 진보 거부감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진보 공감도 최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	중도·보수 찬성 < 진보 찬성

2. 쟁점별

가. 통일의 경제적 비용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일비용, 통일세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축소(38.9%)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36.4%)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지

원 규모 증대에 대한 회의감이 ‘세 부담’이라는 ‘비용’ 부담에 의한 것이 큰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 부담’에 대한 우려는 지난 3개년과 올해에 이르기까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본 조사 결과는 8·15 경축사 이전으로 통일세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을 때이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세 부담 비용에 대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시기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8·15 축사 이전에는 현실적 부담으로 대북지원,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가 8·15 축사에서 ‘통일세’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 인지해야 할 것은 ‘비용’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어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면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조사 당시까지는 비용 부담 보다는 대북지원의 ‘오용’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에 대한 우려¹⁾나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주된 축소 이유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까지 하다.

그리고 대북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확보될 경우, 통일비용으로 까지 이어지는 비용 나눔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확인하게 한다. 즉, 비용 부담에 대해 왜곡의 우려를 줄이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것이라는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간다면 대북지원 뿐 아니라 통일 비용 ‘나눔’에 대한 지지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별, 이념²⁾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지원에 대한 견해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별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별로 집중적인 지지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통일의 사회문화적 비용 예측 근거로서의 국민의식은 어떠한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일 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는

1) ‘국내 정치적 이용’과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국민 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진보는 2.2%인 반면 중도 13.3%, 보수 13.4%로 었으며, 남성 6.4%, 여성 13.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1차 집단 내로 인입하거나 ‘사업동업자’라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맞부딪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방이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일정정도 남북한 ‘사람들간’에 나타날 ‘거리두기’를 시사한다. 이러한 ‘거리두기’가 큰 변화의 폭 없이 다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사회 통합의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 견해차가 성별, 교육, 직업, 소득, 지역 등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폭넓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저학력자와 저소득층,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역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들이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위기의식과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 200-299만원 가구소득의 중간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그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층이 통합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통합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집단과 견해차를 보이면서 부정적·경쟁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현실, 북한주민은 미래’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지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막상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함께 살기가 시작된다면, 현실의식의 작동으로 경쟁적 대립 의식이 확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때, 갈등의 폭발과 확산까지도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남북한 사회 통합 방안 구축과 비용 예측 및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 ‘지원 Vs 인권’ 구도는 국민의식 속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북지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보다 현저히 앞서고 있으나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며,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매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드러난 것이며, 인권 개선의 시

급성과 정부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불어 조용하는 인권과 지원에 대한 인식의 접합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인권 개선의 시급성과 지속적 문제제기에는 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하나 대북지원은 축소, 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라는 점은 아직까지 대북지원과 인권을 별개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인권개선은 주로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정치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은 인도주의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판단 하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률이 지원 확대를 공감하지 않는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과 조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북지원과 대비해 ‘투명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인권과 지원을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나, ‘신뢰’를 갖대로 양자의 연계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즉, 지원이 실질적으로 인도주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때는 대북지원과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의 찬성률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 바와 같이 지원과 인권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북지원에 비해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달리 보면, 대북지원 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남한 사회의 안정’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는 ‘실리주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될 경우 그 지지도가 반대보다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원을 통한 ‘인도주의’ 가치 실현을 제고한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면, 지지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VI. 결론: 국민 의식의 향방과 통일론, 통일세

본 조사 결과에서 우세적인 응답률을 보인 답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대북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되, 단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남한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일단 남한에 입국 한 이후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세 속에 국민들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각 영역별로 각각에 대한 지

원과 개선이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논의되는 통일 비용, 통일세와 관련한 국민 의식의 향방을 가늠케 해준다.

대북지원이 현재로서는 인도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감으로 축소 및 현재 수준 유지라는 견해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크게 앞서고 있으나,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히려 대북지원으로 인한 ‘국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고 있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국민의 의식이 ‘인도주의’라는 목적의식에 부합할 경우 ‘세 부담’ 자체만으로 반대의사를 굳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서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목적의식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이웃할 수도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안정과 연관된다는 ‘실리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 비용, 통일세, 통일논의가 정치적 목적을 비롯한 목적의 왜곡과 오용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다면, 더욱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맞닿아 있다는 ‘실리주의’적인 현실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해 진다면, 통일비용, 통일세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통일 논의의 진전은 속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결과분석 II

발표3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강원택(서울대 / 정치학)

발표4 천안함과 대외인식 이상신(IPUS / 정치학)



정치의식과 대북정책

강 원 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 들어가는 말

2010년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조사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져 있었던 한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한편 6월 초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북풍' 선거 전략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만큼 집권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북한 변수를 선거에 활용하려한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말하자면 북한의 소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존재했던 셈이다. 흥미롭게도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느 한 쪽으로 강하게 쏠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국민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대북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대북 정책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고 또 대북정책에 대해 상이한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독립변인은 이념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이념을 가르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시각의 차이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등이 모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념적으로 자신을 보수, 중도, 진보로 규정하는 이들이 각각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조사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세적 행태가 이념 집단별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즉 천안함 사건이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보다 공세적 대북 정책을 선호하게 변화시켰는지 아니라면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차이는 오히려 증대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는 까닭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소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이념 집단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대북정책에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가 이념적 시각의 차이보다 국내 정치적 요인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

다. 즉 단지 이념 집단 간 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파적 속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2. 이념과 대북 정책

서구에서 정치 이념은 대체로 경제적 재화의 배분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 의해 나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좌파(left)와 우파(right)로 불리는 이념 갈등은 근대 사회의 계급정치적 균열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념 갈등은 종종 북한이나 그와 관련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 여부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보수나 진보냐 하는 이념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정체성의 구분이 북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념 집단별로 북한과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이념 집단별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1>은 북한에 대해서 각 이념 집단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두 네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볼 수 있느냐', '북한 정권은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하느냐', '북한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대체로 대북 정책의 파트너로서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특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념 집단별로 대체로 일관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중도, 보수로 갈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강해졌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패턴의 응답이 확인된다.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갈수록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커졌다. 그러나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의 강도가 강하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북한이 최근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북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 집단 간 상이한 태도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응답을 요약하면, 보수적 시각은 북한은 대화, 타협이 어렵고 통일도 원하지 않으며 그 사이 내부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수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을 나타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중도는 보수보다는 그런 불신의 정도가 덜 하고 진보의 경우 비교적 그런 불신이 가장 약한 편인 셈이다.

네 번째 질문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패턴은 앞의 세 가지 질문과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

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크고 작은 도발이 지속되어 온 탓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표 1>에서의 질문은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혹은 민족적이든 남한의 대북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을 제외하면, 이념 집단별로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이를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북한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인식

질문	이념	평균	분산분석
¹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	진보	2.66	F=15.5 p<0.00
	중도	2.75	
	보수	2.98	
²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진보	2.92	F=6.5 p<0.00
	중도	3.07	
	보수	3.11	
³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진보	2.51	F=6.2 p<0.00
	중도	2.68	
	보수	2.70	
⁴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진보	2.19	F=0.43 p=0.65
	중도	2.23	
	보수	2.23	

- 1: 1-매우 가능, 2-어느 정도 가능, 3-별로 가능하지 않다, 4-전혀 가능하지 않다.
 2: 1-매우 원한다, 2-다소 원한다, 3-별로 원하지 않는다, 4-전혀 원하지 않는다.
 3: 1-많이 변하고 있다, 2-약간 변하고 있다, 3-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4: 1-많이 있다, 2-약간 있다, 3-별로 없다, 4-전혀 없다.

그런데 대화, 접촉, 협력의 파트너로서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막연하고 주관적 응답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와의 직접, 간접적 연관 속에서 북한을 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혹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단기적

요인,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응답자들이 북한을 우리에게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즉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진보	중도	보수
지원 대상	17.8	20.5	19.2
협력 대상	<u>49.2</u>	44.7	<u>37.5</u>
경쟁 대상	3.0	3.5	3.4
경계 대상	<u>18.8</u>	21.8	<u>21.1</u>
적대 대상	<u>11.1</u>	9.4	<u>18.8</u>
합계 (N)	100.0(398)	100.0(541)	100.0(261)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20.1 df=8 p<0.05		

<표 2>에서는 <표 1>에서와는 다소 다른 응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수, 진보, 중도의 구분 없이 대체로 유사한 응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진보 집단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그렇게 응답했고 보수 집단에서도 그 비율은 37.5%로 가장 높았다. 가 그렇게 응답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대상이라는 비교적 호의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적 입장에 대한 응답은 진보 집단보다 오히려 중도, 보수 집단에서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이라는 유화적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응답을 합하면 진보 집단 67%, 중도 집단 65.2%, 보수 집단 56.7%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절반 이상(진보, 중도의 경우에는 2/3)의 응답자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협력이나 지원 대상이라는 유화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념과 무관하게 대체로 3% 선에 머물렀다.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응답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보수 집단의 21.1%, 중도 집단의 21.8% 그리고 진보 집단의 1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예상했던 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8.8%인 반면 진보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1.1%, 그리고 중도 집단은 9.4%에 불과했다. 보수 집단에서 북한을 적대적 대상

으로 보는 시각이 유독 강하게 나타났다.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까지 합하면, 북한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보수 집단의 경우 39.9%, 중도 집단은 31.2%, 그리고 진보 집단은 29.9%로 나타났다.

<표 2>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념 차이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체로 유사한 응답의 패턴이 이념과 무관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응답 패턴 속에서도 보수 대 진보의 시각 차이는 확인이 되는데,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계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데서 두 집단 간 대체로 10% 정도의 응답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보수 집단의 경우 적대, 경계 대상(특히 적대 대상이라는 시각)이라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반면, 진보 집단의 경우에는 그런 적대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본 <표 1>에서도 지적한 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 이념 집단 간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보수 대 진보라는 이념의 차이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기본적인 응답의 패턴은 보수, 중도, 진보와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즉 북한을 우리에게 어떤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예상만큼 그다지 커다란 차이를 이념 집단 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변수는 현실 한국 정치에서는 이념적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는 이념 집단 간 북한에 대한 인식의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대북 인식, 혹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고려가 반영된 태도에서는 이념 집단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파트너로서 북한에 대한 신뢰감은 이념 집단 간 비교적 분명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은 결국 단기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념 집단 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사실 남한의 현실정치 속에서 북한이 갈등의 원천이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둘러싼 것이거나, 보다 분명하게는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정책 추진으로 인해 과거 냉전 시대에 적대적인 대북 정책으로부터 변화가 발생했을 때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장해 온 반면,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대북 유화정책을 선호해 왔다. 이후 어떤 정부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면 보수적인 국민들이 반발했고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게 되면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반발해 왔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은,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치 이념에 따른 상이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개별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표 3>는 각 항목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고, <표 4>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항목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비슷한 질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표 3>가 규범적 속성의 질문이라면 <표 4>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단기적, 전략적 고려가 포함된 질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는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그 패턴은 질문마다 조금씩 달랐다.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세 이념 집단 간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며 보수적으로 갈수록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것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 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보 집단과 중도-보수 집단의 양극적 패턴으로 입장이 구분되었다. 진보 집단이 두 항목 모두 적극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중도와 보수는 서로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평균을 각 질문 항목별로 비교할 때도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제일 높은 2.02로 나타났다. 개별 대북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념 집단별 응답은 차별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전 항목에 걸쳐 일관되고 뚜렷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4>에서는 모두 여섯 가지 대북정책이 제시되었는데 흥미로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 앞에서 본 <표 3>와 비교할 때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여섯 가지 대북 정책의 시급함에 대한 응답은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른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여섯 가지 질문 중 군사적 긴장 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이념과 무관하게 시급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분산분석 결과 이념 집단 간 평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적 긴장 해소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1.74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분산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중도와 진보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이 사안 역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보수 대 진보 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지만 F 값은 비교적 작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인권 개선 역시 보수 대 진보의 시각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의 시급함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전체 평균은 군사적 긴장 해소(1.74) 다음으로 낮은 1.8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섯 가지 정책 사안 가운데 두 번째로 시급함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분명했던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두 가지 사안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진보 대 중도-보수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는 시급하다고 본 반면, 중도-보수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그런데 이 응답 패턴은 <표 3>에서 제시된 비슷한 질문 항목의 응답 패턴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표 3>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고, 평균값도 네 개의 질문 중 제일 낮았다. 그런데 시급함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중도 간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단기적, 전략적 고려로부터의 평가 사이에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이념 성향별로 매우 뚜렷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진보-중도-보수로 갈수록 그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체 평균은 2.96으로 매우 컸다. 다시 말해 미군 철수가 이념 집단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사안이라는 하지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진보 집단의 평균은 2.88로 '별로 시급하지 않다'에 가까운 응답이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해소나 이산가족, 국군 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입증될 만큼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역시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함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 철수가 '전통적인' 보수-진보 논쟁의 한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급함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사실 근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진보와 보수-중도 집단 간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앞에서의 결과가 함께 고려한다면 근원적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상황적,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평가 A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이념	평균	분산분석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진보	2.34	F=5.44 p<0.01
	중도	2.48	
	보수	2.55	
	평균	2.45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사회문화 교류	진보	2.12	F=4.07 p<0.05
	중도	2.26	
	보수	2.24	
	평균	2.21	
금강산,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 경제 협력	진보	2.09	F=3.83 p<0.05
	중도	2.23	
	보수	2.22	
	평균	2.18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진보	1.97	F=1.53 p=0.22
	중도	2.06	
	보수	2.04	
	평균	2.02	

주: 1-매우 도움이 된다, 2-다소 도움이 된다, 3-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 4〉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 B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안의 시급함	이념	평균	분산분석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진보	2.01	F=10.7 p<0.00
	중도	2.23	
	보수	2.17	
북한의 개방과 개혁	진보	1.79	F=10.6 p<0.00
	중도	2.02	
	보수	1.91	
군사적 긴장 해소	진보	1.70	F=2.0 p=0.14
	중도	1.79	
	보수	1.71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진보	2.80	F=12.6 p<0.00
	중도	2.99	
	보수	3.11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진보	1.90	F=1.5 p=0.22
	중도	1.98	
	보수	2.00	
북한의 인권 개선	진보	1.75	F=3.2 p<0.05
	중도	1.88	
	보수	1.82	

주: 1-매우 시급하다, 2-다소 시급하다, 3-별로 시급하지 않다, 4-전혀 시급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해 기존의 해석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표 4>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과 관련된 각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응답 패턴을 보면, 이념에 따른 시각이 그리 크지 않거나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혹은 이념적 차이가 확인되더라도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일부 대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념적 차이가 북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혹은 보편적 인식 틀의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안마다 다른 응답의 모습을 보이고 태도의 일관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북 정책이 반드시 이념 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으로 보인다.

3. 국내정치와 대북 정책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차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또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대북 정책의 시급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다소 상이한 응답이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북한 변수'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은 우려를 자아낼 만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변수가 이념 간 갈등을 불어오게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보다 그것이 국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그러한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차이보다 국내 정치적 요소가 거기에 결합하면서 그러한 차이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변수는 결국 북한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이 남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의 패턴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의 관심은 남북한에 대해서 유사한 응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각기 상이한 응답의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5>의 결과이다.

〈표 5〉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

구분	항목	진보	중도	보수	카이제곱 검정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21.6	17.6	13.8	$\chi^2=17.3$ df=4 p<0.01
	남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 가능	33.9	28.9	25.8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관계없다.	44.5	53.5	60.4	
	합계(N)	100.0(398)	100.0(540)	100.0(260)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36.2	31.2	37.9	$\chi^2=7.8$ df=4 p=0.1
	북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 가능	35.2	34.8	28.4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는 관계없다.	28.6	34.0	33.7	
	합계 (N)	100.0(398)	100.0(541)	100.0(261)	

〈표 5〉에서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를 보면, 보수의 60.4%는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44.5%에 그쳤다. 즉 진보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 문제와 국내 정치, 즉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수 집단에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중도 집단의 응답은 그 중간이었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남한의 정치적 발전이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국내 정치변수의 중요성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진보 33.9%, 중도 28.9% 그리고 보수는 25.8%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시각은 통일이 남한 민주주의의 독립변수로 바라본 것이다. 남한 민주주의가 통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을 소극적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진보 21.6%, 중도 17.6%, 보수 13.8%로 나타났다.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에 대한 응답의 패턴은 보수, 중도, 진보 간 매우 일관되고 뚜렷한 패턴을 보여줬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밝혀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교차분석의 결과가 9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각 항목별 보수-중도-진보 집단 간의 응답이 순서대로 변화하는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다만 어느 집단에서든 북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남한 사례에 비해서 크게 낮아서 28-34% 수준이었다. 즉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북한 민주주의는 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이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남한 내부 문제일 때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 5>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북한보다는 남한의 국내 정치적 요소와 보다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 집단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6>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이념 집단별로 나눠 본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북 정책 방향의 설정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국민적 요구의 수용성에 대한 것이었다. <표 6>의 결과는 무척 흥미롭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한 응답에서 이념 집단별로 매우 분명하고도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진보 집단에서 가장 낮았고 중도, 보수의 순으로 높아져 갔다.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보수-중도-진보의 순으로 만족도에 차이가 생겨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 의견을 참조한다는 데 대한 응답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런 응답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보수 집단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진보층에서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실제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이처럼 분명하고 일관된 패턴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의 문제로 회귀할 때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대단히 분명하고 일관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표 6>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평가

태도	이념	평균	분산분석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진보	2.79	F=9.9 p<0.00
	중도	2.68	
	보수	2.54	
현 정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진보	2.92	F=10.0 p<0.00
	중도	2.84	
	보수	2.69	

주: 1 - 매우 만족, 2-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그렇다면 국내 정치적 요인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보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0.38($p<0.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 독립변인이고 어떤 것이 종속 변인인지 구분하기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한 평가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대북정책 만족도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

대북정책 만족도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N	분산분석
매우 만족	1.94	35	F=67.4 p<0.00
다소 만족	2.44	439	
다소 불만족	2.82	596	
매우 불만족	3.35	130	

주: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1-매우 잘하고 있다, 2-대체로 잘하고 있다, 3-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매우 잘못하고 있다.

〈표 7〉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평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대북 정책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대북 정책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비교적 소수라는 점도 지적해 둘 만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표 7〉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내 정치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4. 소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집단 간 불만을 둘러싼 갈등은 실제보다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 집단 간 서로 상이한 시각과 세계관을 갖는 것은 다원주의 정치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변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 종종 '남남 갈등'으로 불렸던 갈등은 서로 용인할 수 없는 격렬한 대립과 충돌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에서 본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집단 간 의견이 서로 수렴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났고 더욱이 전 영역

에 걸쳐 일관되고 분명한 차별적인 응답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 변수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제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제는 이념 집단 간 차이보다 의견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의미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커다란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급속히 치우쳐져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8>은 남북 교류가 통일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10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천안함 사건을 겪은 2010년 조사에서 오히려 이전에 비해 다소나마 높아졌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두 통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단기적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2010	2009	2008	2007
정기적 남북 간 회담	75.3	73.3	64.3	74.7
남북한 경제 협력	68.6	64.2	57.3	72.5
사회문화교류	66.8	68.1	59.9	69.7
인도적 지원	52.3	54.0	51.8	57.4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도움 + 다소 도움]

그러나 <표 3>, <표 4>에서 본 대로, 장기적 평가와 단기적 대응에 대한 태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남북회담의 정례화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통일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는 두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보듯이 네 명 중 세 명이 정기적 남북 회담이 통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

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더라도 방법론, 전략의 문제로 이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미래에 정례적인 남북 정상 간 회합이 필요하다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수도 있다. 즉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 9>에서는 여섯 가지 쟁점이 되는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의 패턴을 요인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요약해 보았다.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대북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요인분석(회전된 성분 행렬)

대북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성분	
	1	2
약간의 희생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u>.847</u>	-.048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u>.849</u>	-.074
북핵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 하지 말아야 한다	-.229	<u>.707</u>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u>.429</u>	.194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434	<u>.655</u>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110	<u>.857</u>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요인 분석 결과 대북 관련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뼈라 살포 제재가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북핵과 대북 지원 연계,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국제사회 대북 제재 동참을 또 다른 성분 속에 포함되었다. 성분 1은 대북 협력 사업의 지속,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의 제한과 같은 대북 협력 혹은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성분 2는 이와는 반대로 보다 공세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경과 온건의 두 가지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나 영향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교류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공세와 같은 어떤 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표 9>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보수, 진보의 논의 틀 속에서 본다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대북정책으로만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기서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북한 변수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사실 보수, 중도, 진보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예상만큼 일관되고 포괄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사안별로는 오히려 시각의 수렴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격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공세적인 것과 유화적인 것 모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과 대외인식

이 상 신(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1. 들어가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 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6자 회담의 무력화, NLL을 둘러싼 대청해전, 그리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중단 등의 일련의 사건을 겪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남북관계는 지난 2년 반 동안 급격히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으며, 결국은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하고 해군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직후 남한 정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몰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 날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유력한 증거로는 침몰한 해역 인근에서 인양한 어뢰 파편이 제시되었다. 나흘 후,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상교통로 이용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한 교역과 교류의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조치 회부 등이 실행되었다.

이후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의 파열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와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여기에 북한도 해안포 발사 및 전쟁불사 발언을 통해 강경대응,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를 동북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애초부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북한 제재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것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태도 때문에,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더욱이 이 성명에서는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천안함의 침몰은 향후의 남북관계를 규정짓고 동북아의 역학구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사건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 후 약 4개월이 지난 후인 7월 12일에서 7월 24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 중에는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식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6월 2일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지방정부에서 대약진한 이후였고, 또 7월 9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된 이후이기도 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열띤 관심이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은 후였다.

올해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은 남한 정부 또한 천안함 침몰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답하였다. 비록 예년 통일의식조사에 비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 제재나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같은 평화적 해법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또한 2010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은 한국인들의 대외관계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 호전되어 왔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올해도 역시 그 패턴을 이어갔다. 반면, 올해 조사의 대외인식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에 대한 태도의 급격한 변화였다. 천안함 이후 많은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도 견줄만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힘에 남한 국민들은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꼭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천안함 사건이후 한국 국민들의 대외인식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변화들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상황적 대응의 수준이라고 보인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대해 우리가 가져왔던 기본적인 인식의 틀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인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중관계의 급작스런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국제정세 인식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한편,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 ‘유연한 현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현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상당수 국민들이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6.2 지방선거의 여당 참패의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다는 것을 2010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보여준다.

2. 천안함 사건과 정부에 대한 불신

2010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이 불신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였으며, 세대간 격차 및 소득 수준, 정치적 이념 성향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 수준에 있어 영호남간 지역 차이는 사실상 없었으며,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른바 “1번”이라고 적힌 어뢰파편을 직접적 물증으로 제시한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소홀한 대응도 한 몫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천안함 사고 시각에 대한 끊임없는 말바꾸기, 천안함 사고 동영상의 뒤늦은 발견 등이 국민의 의혹을 부추겼다. 북한 역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야당 및 민간 전문가들이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는 점 등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 2일의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불신 경향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6.5%가 넘었다¹⁾. 같은 시기 중앙일보, SBS,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67.2%에 이르렀고,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64%였다²⁾.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물증이 제시되었고 사건 해역이 북한과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는 백령도 인근이라는 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북한을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결코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불신은 실제로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MB심판론”에 공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신뢰가 안가서”라고 대답한 비율은 10.8%로,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³⁾

이러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 발표의 불신 경향은 위에서 인용된 조사들에 비해 한 달 이상 후에 실시된 이번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반응은 6.4%, 신뢰하는 편이라는 반응은 26.1%에 그쳤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나 신뢰 안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각각 10.7%와 25%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35.7%)이 신뢰한다는 반응(32.5%)보다 약간 높은 비율

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31095406 §ion=0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31095406§ion=01) (검색일: 2010년 9월 3일)

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207207 (검색일: 2010년 9월 3일)

3)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0061017251132.pdf (검색일: 2010년 9월 3일)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여기에 중간점(“반반”)을 선택한 유권자가 31.7% 정도여서, 전체 응답자는 거의 고른 비율로 신뢰 - 반반 - 불신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정부 발표를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못한다고 답한 중간층 유권자들 또한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천안함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거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1〉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정도(%)

(1) 전적신뢰	(2) 신뢰	(1)+(2)	(3) 반반	(4) 신뢰안함	(5)전혀신뢰 안함	(4)+(5)
6.4	26.1	32.5	31.7	25	10.7	35.7

* 전체 응답자 수: 1200명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 신뢰정도와 다른 변수와 교차분석해보면,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거주지역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표 2>). 우선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 이상의 거의 절반 가까운 49.6%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 반면,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0대는 32.8%가, 30대는 26.3% 만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였으며 20대는 50대 이상 세대의 절반도 되지 않는 22.8%만이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했다. 연령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진보(29.3%)와 보수(19.5%)의 정치적 성향 차이도 신뢰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

흔히 이런 연령별 차이는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공산주의와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의 유무 차이로 설명되곤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최고령자는 68세로, 단 한 명이 있었다. 이 최고령 응답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8세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1200명중 60세 이상은 85명이었다. 즉,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응답자는 전체 50대 이상 세대 280명 중에서도 85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최고령층 응답자들도 한국전쟁과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나이가 ‘젊다’. 따라서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정도에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 경험 유무보다는 과거 철저한 반공교육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의 경직성 등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교육수준도 천안함 발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비율도 높은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28.3%) 중졸 이하 학력자들(46.9%) 보다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는 비율이 18.6%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정도 교차분석(%)

		(1) 전적신뢰	(2) 신뢰	(1)+(2)	(3) 반반	(4) 신뢰안함	(5) 전혀신뢰 안함	(4)+(5)
연령	19~29 세	3.6	19.1	22.8	32.7	30.4	14.2	44.6
	30 대	2.2	24	26.3	30.1	28.5	15.1	43.6
	40 대	5.9	26.9	32.8	34.1	24.3	8.9	33.1
	50대 이상	14.7	34.9	49.6	30	16.1	4.3	20.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5	36.4	46.9	29.5	19.8	3.8	23.6
	고 졸	6.9	28	35	33.4	23.2	8.5	31.6
	대재 이상	5.4	22.9	28.3	30.9	27.2	13.6	40.8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9.4	26	35.4	31.1	23.2	10.4	33.5
	200~299만원	5.5	27.4	32.8	32	27.2	7.9	35.1
	300~399만원	4.2	24.2	28.4	32.5	27.1	12	39.1
	400만원 이상	7.5	27	34.5	31.1	22	12.4	34.4
지역	수 도 권	8	23.4	31.4	32.5	24.7	11.4	36.1
	중 부 권	7.6	24.2	31.8	33.1	25.8	9.3	35.2
	호 남 권	2.5	14.3	16.8	31.9	36.1	15.1	51.3
	영 남 권	5	38.7	43.7	28.4	19.3	8.6	28
	강 원	2.8	8.3	11.1	38.9	38.9	11.1	50
	제 주	7.7	7.7	15.4	46.2	30.8	7.7	38.5
정치성향	진 보 적	5.5	23.8	29.3	28.2	26.1	16.4	42.4
	중 도	3.5	25.9	29.4	35.8	26.9	7.9	34.8
	보 수 적	13.9	29.9	43.8	28.7	19.5	8.1	27.5

* 소득수준을 답하지 않은 응답자 3명은 표에서 제외

소득수준 역시 어느 정도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월평균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은 35.4%가 정부발표를 신뢰한 반면,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28.4%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서는 정부 발표 신뢰비율이 오히려 좀 높아져서, 저소득층과 거의 비슷한 34.5%가 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응답자수가 각각 36명과 13명으로 매우 적은편인 강원과 제주를 제외했을 때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집권당의 지역적 정치기반인 영남이었다(43.7%). 이와 대조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지역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호남으로, 고작 16.8%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두 지역 간의 신뢰도 차이는 무려 26.9%에 이르렀다.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은 각각 31.4%와 31.8%로 거의 비슷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수준, 호남지역 이항변수, 영남지역 이항변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의 모두 일곱 가지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는데,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측정 방식, 그리고 가설은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회귀분석 변수 일람

변수명	변수 측정 내용	측정방법	가설*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답변	1= 매우 잘함 / 4=매우 잘못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높을 수록 신뢰도가 높다(+)
연령	4개 연령 그룹	1 = 20대 / 4 = 50대 이상	연령이 높을 수록 신뢰도가 높다(-)
정치적 성향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1=매우 진보 / 3 = 중도 / 5=매우 보수	보수성향일 수록 신뢰도가 높다(-)
소득수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상대적 소득 수준	1= 최고소득 / 3 = 중간 / 5 = 최저소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	1 = 중졸 이하/ 2= 고졸 / 3 = 대제 이상	학력이 낮을 수록 신뢰도가 높다(+)
호남	호남지역 이항변수	1 = 호남 / 0 = 기타지역	호남 거주자들은 신뢰도가 낮다(+)
영남	영남지역 이항변수	1 = 영남 / 0 = 기타지역	영남 거주자들은 신뢰도가 높다(-)
신뢰수준(종속변수)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	1=전적 신뢰 /5 = 전적 불신	

* 괄호안의 + 와 -는 회귀분석시 각 독립변수의 계수의 예상 방향을 의미함.

위에서 정리된 독립변수들이 천안함 정부발표의 신뢰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보고되어 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발표의 신뢰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였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 또한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신뢰수준이 평균 1.75 정도 높을 것이다.

신뢰수준에 대해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이었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젊은 세대는 노년층 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있었다. 20대와 50대 이상 노년층의 신뢰수준 차

이는 약 0.49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만큼 확실한 영향을 끼치지
는 않았지만 그래도 심각할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 회귀분석 -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

	B	표준편차	p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583	.038	.000
연령	-.164	.030	.000
정치적 성향	-.098	.034	.004
소득수준	.078	.036	.033
교육수준	.025	.051	.619
호남	.114	.096	.235
영남	-.088	.064	.170
상수	1.878	.270	.000
Adjusted R ² = 0.243 n=1197 F=55.928			

이 밖에도 신뢰수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변수는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이었다. 우선 정치적 성향은 교차분석에서 예측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천안함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았다. 스스로
를 “매우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
0.39 정도 신뢰수준이 낮았다.

흥미롭게도 소득수준 변수는 예측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즉, 교차분석에서 예상된 가설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 차이는 다른 변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이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최고 소득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
들은 자신의 소득이 최하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에 비해 신뢰수준이 약
0.31 정도 높았다.

이상의 네 변수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연령, 정치적 성향, 소득수준
-가 95% 수준에서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차분석에서는 신뢰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변수로는 교육수준,
호남, 영남이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학력의 높고 낮음은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한 호남이나 영남에 거주하는 것이 정부발
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만한 통계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호
남에 거주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높거나 나이가 많고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면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발표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들이 정부발표를 좀 더 신뢰할 것이라는 예측도 정당화되지 못했다. 젊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영남 사람들은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천안함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로 표시되는 현정부에 대한 불만 혹은 불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천안함 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 혹은 불만이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다른 설문 문항의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천안함 사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지를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54.6%의 응답자들이 매우 혹은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28%, 별로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표 5>).

<표 5> 천안함 사건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1) 매우동의	(2) 다소동의	(1)+(2)	(3) 반반	(4) 별로 동의안함	(5) 전혀 동의 안함	(4)+(5)
12	42.6	54.6	28	14.5	2.8	17.3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에 일정 정도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의 회귀분석과 종합하여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과 불신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현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또 하나의 회귀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표 4>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에 더해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추가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가설은 아래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6〉 회귀분석 변수 일람

변수명	측정방법	가설*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1=매우 잘함 / 4=매우 잘못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높을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연령	1=20대 / 4=5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정치적 성향	1=매우 진보 / 3=중도 / 5=매우 보수	보수성향일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소득수준	1=최고소득 / 3=중간 / 5=최저소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교육수준	1=중졸 이하/ 2=고졸 / 3=대재 이상	학력이 낮을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호남	1=호남 / 0=기타지역	호남 거주자들은 정부책임을 높게 본다(-)
영남	1=영남 / 0=기타지역	영남 거주자들은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신뢰수준	1=전적 신뢰 / 5=전적 불신	천안함 정부발표를 신뢰할수록 정부책임을 낮게 본다(-)
정부책임(종속변수)	1=매우동의 / 5=전혀 동의않음	

* 괄호안의 + 와 -는 회귀분석시 각 독립변수의 계수의 예상 방향을 의미함.

우선 <표 4>의 회귀분석에 밝혀진 소득수준과 신뢰수준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소득수준과 종속변수인 정부책임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 신뢰수준과 정부책임을의 관계에 대해서는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한정부의 책임을 덜 인정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새로운 회귀분석 모델은 <표 7>에 소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정부책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독립변수는 이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수준 등 모두 세 가지였다. 나머지 다섯 가지 변수 -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호남, 영남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먼저 <표 4>의 회귀분석과 비교해보자. 앞선 회귀분석에서는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 정도에 있어 응답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즉, 젊을수록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던 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한정부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연령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남한정부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에는 젊은 세대나 노장년 세대가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표 4>의 모델에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였던 것에 반해, <표 7>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도 다른 점이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에서 호남이나 영남의 지역주의 변수 및 교육 수준은 의미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회귀분석 - 천안함 사건과 현정부의 대북정책의 책임

	B	표준편차	p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154	.040	.000
연령	-.024	.029	.407
정치적 성향	.168	.033	.000
소득수준	.040	.035	.254
교육수준	-.020	.050	.692
호남	-.146	.093	.119
영남	.108	.063	.085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	-.160	.028	.000
상수	2.920	.267	.000
Adjusted R ² = 0.081 n=1197 F=16.137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이었다.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발표를 불신할수록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두 모델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보수적인 현정부에 대해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이 반드시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천안함 관련 발표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261명 가운데 4분의 1이 좀 넘는 27.5%가 천안함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표 2〉).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497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에 달했다(〈표 8〉).

〈표 8〉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1)+(2)	(3) 반반	(4) 별로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5)	합계
이명박 대통령 부정 평가	16.7% (117)	43.5% (305)	60.2% (422)	26.7% (187)	11.4% (80)	1.7% (12)	13.1% (92)	100.0% (701)
이명박 대통령 공정 평가	5.4% (27)	41.1% (204)	46.5% (231)	30.0% (149)	19.0% (94)	4.4% (22)	23.4% (116)	100.0% (496)
합계	12.0% (144)	42.5% (509)	54.5% (653)	28.1% (336)	14.5% (174)	2.8% (34)	17.3% (208)	100.0% (1197)

위의 표에서 보듯, 천안함 문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전체의 17.3%에 불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켰다고 믿는 국민들 역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단순히 북한의 적화야욕이나 김정일 정권의 호전성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년 반 동안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핵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힌 천안함 사건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과 자제력,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점은 천안함 사건의 해법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화적이면서도 확실한 북한 제재 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표 9〉).

〈표 9〉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	현재 상태의 유지	국제 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	모름/무응답
33.1%	11.8%	44%	10.5%	0.2%

46명의 무고한 장병의 희생을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0.5%로 적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77.1%)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같은 현실적이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 같은 유화적인 방안을 선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서 결론 내려 보면, 한국인들은 최소한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해서도 6.2 지방선거에서 ‘안보위기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선거 때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장하여 이용했던 이른바 ‘북풍’의 효과는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미국과 중국의 이미지 변화

2009년 조사된 통일의식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미국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효과로 생각되는 이 미국 이미지 제고현상은 한국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 현상의 일부였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이미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목할 만큼 좋아졌는데,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견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약 10년 전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⁴⁾

작년에 이어 올해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미국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이미지는 매우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변했다. 우선 미국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오바마 효과로 다시 설명하기는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등의 여파로 취임 직후 7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현재는 40%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미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며 천안함 사건이후 수습과 조사,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춘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이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이미지가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계속 호전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이미지는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역시 천안함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한 점,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천안함 문제가 남북문제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산되

4)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게 한 점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현재까지는 근본적 태도 변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이미지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서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

〈표 10〉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2007	53	11.5	23.8	10.1	0.9
2008	59.9	9.6	20.3	7.7	1.6
2009	68.2	8.7	15.9	6.1	1
2010	70.6	9.6	14.8	4.2	0.7

한반도 주변 4대국과 북한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를 물었을 때,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표 10〉).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은 53%였는데 비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벌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한미동맹의 복원을 선언한 2008년에는 59.9%로 늘어났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에는 미국 선호도가 8.3%나 증가하여 68.2%에 달했다. 2010년에는 미국 선호도가 70.6%까지 올라가서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북한을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2007년 23.8%에서 올해 14.8%로 9%나 줄어든 것이 사실 놀랍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 북한은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라는 것이 더 의외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호감도는 2009년 15.9%에서 불과 0.9% 줄어든 14.8%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선호도 역시 그 감소 비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 이후 계속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2007년에 중국 선호도가 10.1%였는데 올해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4.2%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응답자가 줄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분포 역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증가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11〉을 보면, 주변 4대국과 북한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물었을 때 2007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위협적인 국가라는 반응이 많았다(미국 21.1%, 중국 15.5%). 그러나

미국이 위협적이라는 답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올해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반도에 가장 덜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역시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북한을 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 증가 비율을 보면 2차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거의 20%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2009년 북한 위협도가 52.7%였는데 비해 2010년에는 약 3% 증가한 55.5%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사실 작년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히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갔던 반면 남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었고, 올해 천안함 사건은 46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수반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증가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해도 좋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매우 냉정하게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표 11〉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2007	21.1	25.8	36	15.5	1.3
2008	16.2	34.1 ⁵⁾	33.6	15	1
2009	12.4	17.6	52.7	15.8	1.1
2010	8.2	10.3	55.5	24.5	1.2

2009년과 2010년 사이 위협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2009년 중국의 위협도는 15.8%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0년에는 9% 이상 증가하여 24.5%로 북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위협도는 거의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2010년에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태도 이외의 변수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일외교조사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 4대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표 12>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은 전쟁 발발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작년의 65%에서 크게 증가한 74.7%였다. 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답변은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2.9%에 머물렀다. 중국의 경우는 이 반대였다. 중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절반이 넘는 55.6%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2009년까지의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자국의

5) 2008년 일본이 잠시 북한보다 높은 위협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7월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것을 발표한 사건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반도 전쟁 상황과 관련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인데,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이 좀 줄고 대신 자국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가 좀 늘은 것이 관찰되었다.

〈표 12〉 한반도 전쟁시 각국의 대처 행동 예상

미국					중국				
	한국도움	북한도움	자국이익	중립		한국도움	북한도움	자국이익	중립
2007	50.6	1.3	45.5	2.6	2007	5.3	26.8	56.4	11.4
2008	56.8	1.4	37.9	3.9	2008	4.6	29.4	52.9	13
2009	65	0.7	32.3	2	2009	3.1	38.4	50.8	7.7
2010	74.7	0.7	22.9	1.7	2010	3.2	55.6	37.3	3.8
일본					러시아				
	한국도움	북한도움	자국이익	중립		한국도움	북한도움	자국이익	중립
2007	16.2	3.3	72.7	7.9	2007	3.7	19	59.1	18.2
2008	15.3	4.4	68.5	11.6	2008	6.5	20.4	54	19
2009	24.5	3.8	66	5.6	2009	4.4	22.4	57.6	15.5
2010	17.1	2.2	71.6	9	2010	5.7	19.2	59.5	15.5

위 표를 보면 2010년 이전까지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보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전 까지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약간은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반면, 천안함 이후로는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힘의 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래 <표 13>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 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 4대국 각각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고 묻은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우선 미국을 보면, 한반도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동감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도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협조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율이 83.2%에서 89%로 거의 6%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통일을 위한 각국의 협조 필요성*

미국			중국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2008	90.9	9.1	2008	81.1	18.9
2009	92.9	7	2009	83.2	16.7
2010	94.3	5.7	2010	89	11
일본			러시아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2008	71.7	28.3	2008	75.3	24.6
2009	79.3	20.7	2009	73.5	26.5
2010	76.6	23.4	2010	74.1	25.8

* 4점 척도 (매우 필요 / 필요 / 불필요 / 전혀 불필요) 변수를 2점 척도로 변환하여 요약하였음

이런 변화는 천안함 사건에 한국 국민이 얼마나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동북아의 세력 균형 재편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적대감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태도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각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4대국의 이미지를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나누어 그 변화를 추적해보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의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 14>은 2007년 이후 각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미국의 이미지 변화를 보면 2007년 이후 협력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계대상, 혹은 경쟁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이와 반대로 계속 하락하였다.

비록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국에서 느끼는 위협도가 201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09년의 3.6%에서 2010년에는 3.4%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시 경계대상으로서의 중국의 이미지 역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경쟁대상 이미지는 약 3%

정도 상승하였다. 2008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5% 이상의 응답자들은 중국을 경쟁 혹은 경계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이미지 자체는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표 14〉 주변 4대국의 이미지 변화(%)

미국					중국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53.1	21.9	21.9	2.9	2007	19.3	46.3	30.9	3.3
2008	70.2	13	14.7	2.1	2008	24.3	38.2	32.3	4.9
2009	73.6	13.7	11.7	0.9	2009	21.1	41.9	33.4	3.6
2010	76.4	14.6	8.2	0.8	2010	19.7	45.1	31.8	3.4
일본					러시아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14.6	46.4	30.2	8.5	2007	22.8	40.2	32	4.7
2008	17.1	35.7	30.4	16.6	2008	29.4	35.2	31.1	4
2009	19.6	49.3	26.2	4.9	2009	28	39.8	29.8	2.3
2010	14.4	50.9	28	6.7	2010	21.7	40.6	33.5	4.2

결국 위의 <표 1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2007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주변 4대국의 이미지는 큰 변화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도가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미지 자체는 변화했다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역시, 경쟁대상 혹은 경계대상으로서의 인식 비율이 좀 달랐을 뿐 그 기본 이미지 자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협력대상이었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을 뿐 근본적인 기저 인식들의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미지 또한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5>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답변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북한의 이미지는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56.6%에 달한 반면, 이 비율은 올해 44.7%까지 떨어졌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말한 비율은 2007년 이후 약 5.4% 정도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말한 비율은 2008년과 2009년 사이 제 2차 핵실험 이후 거의 9% 상승한 것이 올해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표 15〉 북한의 이미지 변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지원대상
2007	56.6	3.3	11.8	6.6	21.8
2008	57.6	3.8	11.3	5.3	21.9
2009	50.7	2.3	20.6	9	17.4
2010	44.7	3.3	20.7	12	19.3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그 비율이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답변은 약 2% 정도 높아졌다(17.4% → 19.3). 즉, 북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들은 지금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은 협력 혹은 지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천안함 이후 주변 4대국과 북한을 보는 시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도 그 기저에 깔린 인식들 자체는 상당히 안정되고 유지되고 있다. 인식들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래 〈표 16〉에서 제시되고 있다.

〈표 16〉 북한 對 미국 월드컵 경기에서 응원할 팀

	북한	미국	양팀 모두	응원안함	기타
2007	80.8	4	6.1	8.8	0.3
2008	76.1	6.6	6.4	10.9	0.1
2009	68	8.4	9.8	13.6	0.1
2010	70.1	8.6	9.9	10.9	0.1

북한과 미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경기에서 만난다면 어느 쪽을 응원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2010년 조사에서는 70.1%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미국을 응원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2007년 부터의 변화를 보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비정치적 스포츠의 장에서라면 미국보다도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올해 개최된 남아공 월드컵에 북한팀이 실제로 출전했고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것이 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남한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태도와 비정치적 부분에서의 태도를 분리시켜 북한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변화가 기본적 인식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또 다른 증거도 될 것이다.

4. 결론 - “유연한 현실주의”

2009년 통일의식조사 분석에서 필자는 한국인들의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2010년의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작년에 비해 사뭇 달라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유연한 현실주의 시각이 한국인들의 남북문제 및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천안함 문제에 있어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단 이것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천안함 문제를 대하는 남한 정부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솔직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호전성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도 그 원인의 하나였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다면적이고 비판적인 인식 능력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안보위기 결집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를 보였다. 한미동맹이 강화된 것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욱 강고해 진 것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아졌고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다. 또, 중국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는 시각이 대폭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주변국들의 행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관계의 이해도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주변 4대국과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틀 혹은 국가 이미지를 바꿀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협력 혹은 지원의 대상이며, 미국은 굳건한 동맹국, 중국은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라는 한국인들의 각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

Session 2

통일의식 · 통일론 · 통일세

사회 | 박명규(IPUS소장)

패널 | 김영수(서강대), 박순성(동국대), 박영호(통일연구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정낙근(여의도연구소), 조동호(이화여대), 김병로(IPUS)



<토론문>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김 영 수(서강대 교수)

- 통일의식 조사와 관련,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 현실주의적 접근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중적' 국민의식으로 해석·표현한 것을 다듬을 필요 있음
 - 이중적이란 표현을 통해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타당한 통일논의와 방안을 찾아가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이중적이지 않은 국민의식'의 양상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표준 상을 제시해주어야 함
- 8.15 경축사에 나타난 통일관련 제안을 <3대 공동체 통일구상>으로 정부는 표기하고 있음
 - 보도 자료에 나타난 신 3단계 통일방안은 정부의 의도와 다른 차원에서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초기에 표현한 명칭에 준해서 표현한 것인지?
-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시각과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추론해 볼 필요 있음
 - '남조선'의 속셈을 최종 파악했다고 판단할 가능성 / 그 결과 향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재수정
 - 북한 붕괴 임박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 / 특히 외부 동향에 익숙한 북한 간부들의 생각 / 대남 전략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 / 강·온 선택 고민 중
 -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민족' 강조에 대한 북한식 판단 / 대남 통일전선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작용 / 정치전·사상전으로 치달을 가능성 높아짐

- 통일세 제기 이후 남북관계 양상은 민족 내부 갈등(intranational conflict)구도로 전개될 가능성 높음 / 분단 이후 민족간 갈등(international conflict)으로 전개되던 양상의 전환 가능성
- 대북 심리전 효과의 크기 추정
- 해외 대북 투자 및 지원 축소 및 중단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의 생각 : "우리 빼놓고 통일을?"

○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노력과 대응이 필요

- 1) 한쪽으로 치우친 대립각 형성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생존'과 '공존'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는 균형 감각에 기초한 통일논의 필요
- 2) '친숙도' 제고를 통한 '북한' 파악 능력 확보
 -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에서 출발 /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알리는 것이 남남갈등 해소의 지름길이며, 통일논의 활성화에 주효
- 3) '땅의 통일'과 함께 '사람의 통일'을 지향하는 '똑똑한(스마트)'한 대북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
 -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 시급 / 인도주의적 접근의 효과를 계산하여 예전과 다른 인도적 지원 방안 실행 / 핵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에 입각, 대북 심리전 전개
 -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노력 / '탈북자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전략적 관여' 실행 / '조선족 활용'을 통한 긍정적 한국 이미지 형성에 주력
- 4) 통일관련 용어 다듬기
 - 흡수통일, 급변사태, 통일세, 통일교육 등 통일관련 기존 용어의 다듬기를 통해 통일관련 긍정적 이미지와 마인드가 형성되도록 노력
 - 우리가 바라는 통일,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비상사태, 통일준비기금, 통일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통일연습, 통일예행연습 등으로의 변화가 필요

5) 통일세 관련 비생산적 논의를 반복하지 말고, 정부 주도의 통일기금 마련 노력을 보임으로써 통일세 논의를 선도

- 사업성 계정의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성 계정으로 전환, 통일비용의 종자돈으로 활용 / 통일이득(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논리와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설득력 제고에 주력

- 독일 통일 20주년을 계기로 통일의 이점과 준비된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는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접근 필요

6) 통일 상상력에 기초한 통일한국 미래상 구체화 작업 필요

- 통일 이후의 달라진 삶의 환경과 삶의 수준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통일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 만들기 시도

- 통일 미래상을 그리는 시나리오,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한시적 인센티브제 도입

- 통일 상상력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및 남남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미래 끌어당겨 보여주기' 작업 필요

7) 통일한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위상을 이웃 국가에게도 알리는 심화된 문화외교를 지금부터 시작

8) 통일준비역량 확충을 통한 통일한국의 정체성 창조에 주력

- 통일의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 / 統一이 아니라 ‘通異’

- 통일연습을 통한 통일전략 모색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 구체화 작업 필요

<토론문>

한국인의 통일 의식, 새로운 경향 또는 의식의 성숙¹⁾

박 순 성(동국대학교-서울)

- 국민들의 통일의식 동향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제시하는 설명·해석 및 정책적 함의는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음
 - 국민들의 통일의식 동향은 전체적으로 합리적 설명 또는 이해가 가능함
 -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의 변화 및 남북한의 정치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남한과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 및 남북한 당국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 설명 또는 해석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논평
 -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20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20대의 보수화’ 명제를 가져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
 -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에 대한 응답을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고, 또한 ‘북한 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
- 통일과 민족/국가/사회/개인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해관계’,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등에 대한 응답들과 관련하여 교차분석이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만일 교차분석에서 높은 상관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판단될 것임
 - 일단 교차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거칠게 추측한다면, ‘통일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또는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는 비율이 올라갈수록, 또는 통일을 민족이나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증대할수록, 통일의 이유 및 이해관계 그리고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응답도 달라질 것임

1) 이 토론문은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와 박정란,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을 읽고 준비한 것임

-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답변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무엇을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남한의 경우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에 대한 평가가 2009년이나 2010년 모두 50% 전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필요함; 특히 남한의 경우나 북한의 경우 모두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0% 전후라는 사실은, 특히 남한과 관련하여, 쉽게 해석하기 힘들
-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 국가, 사회, 개인 등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면, 이는 국민의식의 주요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음
- ※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는 ‘선택적 수용’이 ‘모두 수용’보다 높음 (2010년)
- 이는 통일세와 관련한 국민여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남북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 ‘(반드시 올 통일)의 날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 등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

- 정은미의 해석: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층이 증가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안보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면해서는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세의 즉각적인 도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 . .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008년 52.2%, 2009년 63.6%, 2010년 67.3% (없다 32.5%)

- 박정란의 해석: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축소(38.9%)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34.6%)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 . . ‘비용’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어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면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 . . . **대북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확보될 경우, 통일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용 나눔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확인하게 한다. . . . 향후 통일 비용, 통일세, 통일논의가 정치적 목적을 비롯한 목적의 왜곡과 오용이 아니라 목적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을 넓혀

나갈 수 있다면, 더욱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맞닿아 있다는 ‘실리주의’적인 현실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해진다면, 통일비용, 통일세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통일논의의 진전은 속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노태우 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음; ‘(반드시 올 통일의) 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때, ‘현실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음
- 만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평화적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일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발전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평화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라면, ‘통일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규모’ 자체도 단기간에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임; 더욱이 ‘평화를 통한 통일’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분단비용 또는 분단 관리 비용 그리고 증대하는 평화배당금을 통일비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렇지만 다른 형태의 방안에 따른 통일이나 예상하지 못한 통일의 경우에는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쉽게 국민적 합의를 찾기 어려울 것임; 특히 비용의 급격한 증대는 개인적 이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 이익 차원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힘들 것임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박 영 호(통일연구원)

2010년은 한반도 분단 65년, 6.25 전쟁 60년의 해이다. 눈을 돌려 바깥을 보면, 독일 통일 20년의 해이기도 하다. 독일 통일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20대의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통일은 희망이나 염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희망이나 염원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선택된 정책을 제대로 이행·추진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 역사 발전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는 혜안도 갖추어야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문제가 일상의 생활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는 평화와 안보의 문제에서 상수가 되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통일 관련 기사가 on-line 또는 off-line 매체에 거의 매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의 누적이 한 원인일 수도 있다.

분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통일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가 발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인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문제가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통일은 여전히 먼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독일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통일문제를 다룰 때 통일보다는 남북관계에 치중한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통일로 가는 과정의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또는 발전 그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러한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통일문제가 실질적인 국가발전 문제이자, 나와 가족, 이웃과 사회의 발전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국가발전의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성공한 유례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제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더 보완·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사 발전에서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는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통일’ 문제는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G10을 넘어 G7, G5를 향한 국가발전 목표는 통일의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이제 통일론은 정서적 담론, 이상적 담론 또는 관념적 담론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실질적인 과제로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통일세’의 문제는 통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자원 동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통일 시기에 대하여 향후 20년 또는 20~30년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응답 경향은 1990년대 초나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2010년의 경우도 거의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하여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세의 문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어떻게 재원을 염출하는가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위한 자원 동원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는 통일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분단 60년의 역사 발전을 평가하면, 남한은 성공의 역사로, 반면 북한은 실패의 역사로 귀결된다. 이제 한반도 전체를 성공의 역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부터 실질적인 통일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의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 동원의 차원에서 ‘통일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가발전 수준,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통일을 향한 준비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역사 발전의 흐름, 즉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판단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다.

통일의식, 3대 공동체 통일정책, 통일세

이 상 현(세종연구소)

1. 통일의식 조사에 관한 논평

-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식의 ‘이중성’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현상임.
- ‘관념’으로서의 통일과 ‘현실’로서의 통일은 다를 수밖에 없음. 특히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일수록 현실감이 부족한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2.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3대 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 금년 경축사 중 대북정책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라는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것임.
- 지금까지 한국의 공식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었음. 이 구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발표)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계승, 발전시켜 발표한 것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3단계 통일방안임. 1단계는 화해·협력단계, 2단계는 남북연합단계, 3단계는 1민족 1국 통일국가 완성단계임.
-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당면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21세기적인 통일 구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 ‘평화공동체’는 남북간 및 다자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 등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한반도를 의미하며, ‘경제공동체’는 남북 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발전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따라 남북간에 자유로운 경제 교류와 협력이라는 탈근대적인 통일 상황을 의미함. 세 번째 공동체인 ‘민족공동체’는 바로 이들 두 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맞게 되는 영토적·제도적·법적 통일이라는 근대적 통일의 상황을 의미함.
-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평화공동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 구상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음.
- 또한 기존의 평화공존, 혹은 단계별 통일정책에서 북 급변사태, 체제붕괴에 초

점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인상을 줘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3. 통일세 구상에 관한 평가

- 통일세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사전 정지작업 없이 던져진 느낌이 있음. 통일세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함.
 - 첫째, 통일세 제정에 앞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지 않으면 정부는 노력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정부가 우선 통일대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보인 다음에 공론화하는 것이 순서임.
 - 둘째, 한정된 목적세인 통일세만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므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기금 조달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거부반응을 갖고 있음. 또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위한 현재의 목적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됨.
 - 셋째, 북한의 반발로 인한 상황 악화가 우려됨. 국내외에서 공히 통일세가 북한 붕괴, 혹은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 바, 남북관계 경색을 풀지 않고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음.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역도(이 대통령 지칭)가 떠벌린 통일세란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세금’이라는 용어의 거부감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분담금(환경원인자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 ‘교통안전 분담금’, ‘학교용지 분담금’처럼 국민공감대 형성과 입법과정을 거쳐 ‘통일 분담금’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독일의 경우 ① 정부예산의 절감, 또는 정부 지출계획 조정, ② 자본시장에서의 기재, ③ 조세수입 및 조세인상, ④ 국유자산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했음.
 - 독일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우선 통일비용 부담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담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공채 발행 등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했고,
 - 통일비용의 사회계층간 공평분담과 연대의식을 통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연대부가세를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에 7.5%(현재는 5.5%)의 부가세율을 책정해 부

담의 평준화를 기했음.

- 하지만 독일은 통일 이후에 뒤늦게 세금을 도입해 사회적 진통을 겪은 바, 통일 세 도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연대부가세는 91년에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7.5%를 부과했으나 반발에 부딪쳐서 92년에는 폐지했다가 95년에 부활해 98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5.5%로 정착되었음.

○ 종합적 평가

- 이명박 대통령의 새 통일방안과 통일세는 원론적 차원에서는 반대할 수 없으나 시행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책부서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정 낙 근(여의도연구소)¹⁾

I. 통일론: ‘남북통일’을 ‘新한반도국가건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자 자유화시대로서 20세기 산업화시대의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체성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는 통일론 필요
- 한반도 차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3단계통일론」의 2국2체제→1국2체제→1국1체제 방식이 아닌 2국2체제→2국1체제→1국1체제의 ‘체제통합적 통일’(URI: unification through regime integration)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의 연계 발전과 및 한반도 경제권 지향을 통한 북한의 시장화·산업화와 민주화로의 체제전환 및 남한 체제의 진화 필요
- 동북아 차원: ‘지역통합적 통일’(URI: 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로 접근, 안보·경제·문화·환경 등 동북아공동체와 네트워크 지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고 견인
- 한반도 통일은 URC와 URI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이 점에서 가치와 체제의 조화(harmony) 및 共進化(coevolution)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연계해야 함.
-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고토를 회복하는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신통일(neo-unification)’이어야 하며, 통일을 ‘남(1)+북(1) 통일’이 아니라 ‘新한반도국가의 건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신통일론은 통일단계(과정)보다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곧 어떤 가치와 목표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지역과

1) 본 토론문은 토론자 개인의 견해이며, 여의도연구소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도시 중심의 多주체화 발전전략에 따른 광역분권형 연방제(7~8개 광역권)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함.

II. 통일세 : 통일비용의 개념 및 산출방식의 변화 필요

-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비용의 과다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통일
역량(경제측면)의 부족과 국민의 부담(통일세), 국제사회의 협력(지원) 불가피
성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인식 형성에 기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남북경협과 지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교류협력을 둘러
싼 남남갈등 초래
-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단의 폐해를 강조하고
통일이익(편익) 개념을 도입,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통일
비용이 과다함을 돌파하려는 논의가 있음.
- 그러나 통일비용의 논란은 개념과 산출방식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없어 발생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비용의 개념과 산출방식 및 충당방식의 전환을 통
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 통일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논리를 개발, 국민들의 통
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통일비용의 마련에 대한 동의 확보 가능
- 그 일환으로 우선, 기존 통일비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통일 직후 초기 소요되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하고, 그 이후는 통일국가가 형성됐으므로 소요비용을 통
일비용이 아닌 일종의 ‘新국가건설비용’(가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新국가건설비용’은 남한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북한 재건時 개
발을 통해 충당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비용이므로 통일비용이 아님.
-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비용은 통일 초기 북한주민들이 통일이전보다 절대적 생
활수준이 개선됐음을 느끼는 기간, 그리고 남북한간 삶의 격차를 심각하게 느
끼지 않는 기간(차별의식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3년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통
일비용으로 잡으면 됨.
- 그 이후에 소요되는 ‘新국가건설비용’은 국가발전비용 또는 지역발전비용으로
계산되며, 이 시기는 남북한 지역간 국가예산의 공평한 집행이 보다 중요한 과
제가 됨.@

통일의식 · 통일론 · 통일세

조 동 호(이화여대)

-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제시되었듯, 우리 정부는 단계적 통일과정을 지향
- 이처럼 정부가 점진적이고 순조로운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
 - 북한의 내부 정세는 북한정권 수립 이래 이미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돌입
 - * 김정일의 건강 악화, 경제난의 지속적 심화, 후계기반의 불확실성 등
 - 외부적으로도 핵 실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지원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그 결과 북한의 불안정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더욱 악화될 전망
- 따라서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정부로서는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는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급속한 통일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는 것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통일을 위한 현실적 준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
 -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 부처 역시 통일을 현실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촉구
 - 통일세라는 ‘민감하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것도 ‘성공적인 마케팅’
 - 그러나 논의가 통일세 위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 통일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인지로부터 출발하는 통일 의식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2010년 국민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5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
 - 또한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30년 이상’(20.8%)과 ‘불가능하다’(20.6%)로 보는 응답이 크게 증가(2008년 13.8%, 13.5%, 2009년 16.5%, 19.9%)

- 이와 동시에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현실 적합성, 구체적인 액션 플랜, 현 대북정책의 유효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
 - 예컨대 우리 국민은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평화공동체’ 구축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낮은 실정

- 따라서 이상과 같은 통일의식, 통일론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전체 비용규모와 통일세를 포함한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통일의식, 통일론, 통일세

김 병 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통일의식과 대북정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해를 거듭할수록 비판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결적 남북관계로 인해 조성되는 불안과 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쟁불안의식은 한계점인 60%를 넘어서 2010년에 67%라는 최고점에 도달했고, 국민들의 83.6%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군사적 긴장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필요하다는 생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 등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 설정, 대북정책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남북관계의 안정을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11월의 G20회의 준비를 위해, 그리고 남은 현 정부의 임기 내 남북문제를 한결음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6자회담과 천안함을 병행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의 보수여론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에서 출구전략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보수층이 만족할 만큼 북한의 태도를 고쳐놓기는 불가능하다. 또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들 그게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고 믿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2009년 8월말 북한이 갑자기 유화적 태도로 대화를 요구해 왔을 때처럼 말이다. 결국 남북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남북관계의 진전도 불가능하다. 그나마 정상회담이라는 특단의 방법이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줄 뿐이다.

□ 통일론에 관하여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과 3대 공동체 통

일구상, 통일세 등이 제안되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통일론이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론의 부상이 정말로 통일이 가까워졌고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서 남북관계의 관심이 국내로 쏠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다. 시쳇말로 남북관계에서 “할일이 없어서” 통일논의라도 하자는 식이라면 정말 문제가 크다. 중국과 대만처럼 교류·대화·협력이 활발히 진전되어 정착 통일 가능성이 주어지면, 오히려 서로 통일문제를 꺼내기 불편해진다. 그런데 통일론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주 성숙했거나, 아니면 아직 통일의 입구에 전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짜 통일이 가까워오면 아마도 통일이라는 말 보다 효도관광, 수학여행, 북청샘물, 청진공단과 같은 말들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리지 않을까.

통일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조였다. 왕래와 교류를 하다보면 언젠가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구호보다는 통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류와 왕래가 거의 없던 당시에는 더욱더 관광, 방문, 교역, 이산가족 등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정책이 중요했다. 통일은 ‘과정’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론을 정서적, 당위적 차원에서가 아닌, 냉정하고 치밀한 정책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나타날 어려움, 국제사회 및 북한의 반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한 이념적, 정파적 통일론은 피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 신뢰구축 방안이 통일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남북한의 국가성 강화, 비대칭성의 증대, 21세기 보편적 가치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전략을 위한 새로운 통일구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안에는 통일비전과 통일전략, 통일외교, 급변사태 대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와 같은 통일엔진, 그리고 통일을 열망하는 에너지 충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상을 실천에 옮길 통일리더십이 중요하다. 이제 한국은 북한보다 20배가 넘는 경제대국다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통일세에 관하여

‘통일세’ 이슈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대체로 북한정권의 붕괴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준비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서 나왔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정보기관으로부터 후계승계를 진행 중인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경제위기, 사회문제 등에 대한 ‘급박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터이므로 통일준비의 시급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느꼈을 것이다. 언젠가

다가올 통일이 북한붕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통일문제 관심을 촉구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돈문제, 세금문제를 던져 놓으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세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충격요법’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얼마전 미국이 한반도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목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천안함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면서 통일을 이끌어낼만한 외교력이 부족하다면 급변사태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은 더 따져 보아야 한다.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질 수 없다면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상채널을 구축해 놓는다면 하는 등의 대안적 통일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을 원치 않거나 관심 밖으로 두려는 사람이 많은 때에 통일세 논란은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통일세 논의를 공론화하면 제2의 ‘세종시 문제’로 귀결될 우려도 있다. 21세기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서 통일과 재정준비는 중요하고 긴요한 것이지만, 통일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통일비용의 규모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높은 통일비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남북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통일세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